

06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책연구
협력연구과제

arts change the world

예술인 참여를 통한 도농 활성화 방안

/ 2008 . 09

예술인 참여를 통한 도농 활성화 방안

2008년 9월 일 인쇄

2008년 9월 일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편 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0-76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동 1-130번지

전화 02-760-4500, 600

팩스 02-760-4706

www.arko.or.kr

메일 arko@arko.or.kr

이 보고서의 무단전제를 금하며,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예술인 참여를 통한 도농 활성화 방안

/ 2008. 09



연구책임자 : 전효관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연 구 원 : 강원재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전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이광준 (서울시 도시갤러리 추진단 기획1팀장)
임선주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자 문 위 원 : 박찬국 (밀머리 미술학교 대표)
임경수 ((주)이장 대표)
김대일 (하자센터기획부장/노리단 대표)
박석윤 (창문아트센터)
조동휘 ((재) 과천한마당 축제)
지금중 ((전) 문화연대 사무처장)
조주연 (간텍스트 대표)
황덕신 (시민문화네트워크 티팟)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내용

제2장 예술인 관련 현황

제1절 : 예술인 현황

1. 국내 예술인 현황
2. 국외 예술인 지원정책 현황
3. 국내 예술인 지원정책 현황

제2절 : 예술인 공공 참여 현황

1. 공공미술
2. 도시형 커뮤니티 프로젝트 현황
3. 농촌형 커뮤니티 프로젝트 현황

제3절 : 예술인 해외파견 현황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황
2. 문화체육관광부 현황
3. 외교통상부 국제교류 현황
4. KOICA

제3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랜드 플랜

제1절 : 사업 목표 및 이행과제

제2절 : 예술인 농촌 정착사업

1. 목적
2. 기대효과
3. 현황분석
4. 사업개요
5. 추진방식 및 절차
6. 유형별 구분
7. 예산

제3절 1. 예술인 도시 활력화 사업

1. 개요
2. 추진배경과 목적
3. 추진방향과 목표
4. 프로세스
5. 시범사업

제4절 예술인 해외파견 사업

1. 목적
2. 기대효과
3. 현황분석
4. 사업개요
5. 추진방식 및 절차
6. 유형별 분석
7. 예산

제4장 결론

제5장 참고자료

참고문헌



제1장

서 론

제1절 : 연구개요

1. 연구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내용

제1절 연구개요

1. 연구배경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2006년 아르코 비전의 선포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새로운 전략적 목표 설정을 통해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행 과제를 만들어 오고 있다. 경제 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첨예한 양극화가 발생시키는 제반 사회의 병폐를 치유할 문제 해결 방안으로 예술의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더불어 창조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예술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예술인들이 시민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발화점이 필요할 때이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랜드 플랜연구는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목적과 ‘아르코 비전 2010’ 정신에 부합하고, 예술이 사회 속에서 참된 가치로 구체화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기획을 모색하는 차원에 위치한다.

또한 예술인들이 삶과 결합하고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기존에 행해진 공공 영역의 예술 실천의 한계를 넘어,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획 사업을 구상함으로써 예술을 바탕으로 창조되어진 문화사회의 힘을 다시 한 번 보여 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그랜드 플랜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인과 사회의 소통구조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술인이 사람들의 삶과 접촉할 수 있는 예술 실천의 형태를 기획하여 예술과 사람이 만나는 추상적 소통관계를 실질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둘째, 적극적이고 실행 가능한 시범 사업 제시로 예술의 공공적 실천 경로를 확장하고 예술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다.

제시된 시범사업은 기존 공공예술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이어받으면서 위원회가 사회적 자원을 네트워크하고 새로운 예술 실천의 경로를 모색하는 대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예술인 주체의 공공 예술 실천 성격을 강화하려고 하였다

셋째, 배분구조의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기획사업 지원으로 예술 창작-유통-향유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지원금 제도는 예술인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었으나, 금번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사업을 주관하면서 예술인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예술 인력에 대한 새로운 지원 형태를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3. 연구내용

1) 예술인 농촌 정착 사업

기존 지역 개발 사업은 개발의 하드웨어적인 기반 구축에 치중되어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의 능동적 구축 없는 지역 개발 사업은 현재 한계상태에 이르렀다. 문화와 예술이 사회 내에 깃드는 전략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성형수술’ 식의 외형 변화만을 추구하는 문화사업의 한계 또한 분명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예술인이 직접 농촌으로 들어가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아름다운 삶이 묻어가는 농촌을 창조함으로써 예술인과 예술 창작의 힘이 새로운 개발 사업에 혁신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2) 예술인 도시 문화 공간 창출 사업

현대화속에 점점 공동화되어가는 도시의 각 공간과 도시의 문화를 예술의 힘으로 재활력화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한다. 특히 공동화 되가는 도시의 재래시장, 프로그램의 부재로 허덕이는 주민자치센터, 새로운 현대 생활의 산물인 신유목시장 성격의 아파트 시장, 재활용 센터를 대상으로 재활용 예술창작소 등에 예술인이 직접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다.

3) 예술창작인 해외파견 사업

새로운 창작 소재와 창작 방식을 개발하기 위해 예술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와 접촉할 기회를 제공한다. 해외 파견 사업은 예술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과 아울러 파견의 결과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사업은 예술창작자에게는 창작을 자극하고, 또한 시민들은 그로 발생된 수준 높은 문화를 체험하여 예술과 사회가 소통, 결합하는 구조를 창출할 것이다.



제2장

예술인 관련 현황

제1절 : 예술인 현황

1. 국내 예술인 현황
2. 해외 예술인 지원현황
3. 국내 예술인 지원정책 현황

제2절 : 예술인 사회 참여 현황

1. 공공미술
2. 도시형 커뮤니티 프로젝트현황
3. 농촌형 커뮤니티 프로젝트현황

제3절 : 예술인 해외파견 현황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황
2. 문화체육관광부
3. 외교통상부 국제교류현황
4. KOICA 해외파견

제1절 예술인 현황

1. 국내 예술인 현황

1) 예술인의 개념 정의

예술인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예술인은 예술가를 달리 일컫는 말로 예술가와 동의어로 되어있다. 또한 예술가란 ‘예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는 사람’으로 설명되어 있다. 예술가라는 국어사전의 의미규정을 따르면, 예술작품의 창작이나 표현을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그 개념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전적 의미 외에 예술의 의미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장르 또한 다양해지고 애매모호해져 그 의미를 규명하기란 어렵다. 예술인의 개념과 그 유형은 2006년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한국 문화관광정책 연구원, 박영정, 2006)에 정의된 표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표2-1〉 예술인의 유형

구분	명칭	작품	행위유형	텍스트 유형
창작 예술가	조각가	조각	창작(조각하기)	유형(고정)
	화가	그림	창작(그리기)	유형(고정)
	소설가	소설	창작(글짓기)	무형(고정)
	시인	시	창작(글짓기)	무형(고정)
	극작가	희곡(대본)	창작(글짓기)	무형(고정)
	작곡가	악곡	창작(작곡)	무형(고정)
실연 예술가	배우	연극	실연(연기)	무형(유동)
	연주자	연주	실연(연주)	무형(유동)
	가수	연주	실연(가창)	무형(유동)
	무용수	무용	실연(무용)	무형(유동)
	연출가	연극	감독	무형(유동)
	지휘자	연주	지휘	무형(유동)

2) 예술인의 경제적 현황

우리나라 예술인의 경제적 현황은 문화예술실태조사에서 조사한 문화예술인의 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 할 수 있다.

〈표2-2〉 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2006년 조사

구분	전체 평균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대중 예술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없음	26.6	37.0	39.0	73.5	11.0	23.0	8.5	28.0	17.5	24.0	4.0
10만원이하	5.7	27.0	10.0	3.0	1.5	2.5	2.0	1.5	6.0	2.5	1.0
11~20만원	3.6	12.5	2.5	4.5	1.5	2.5	1.5	2.0	5.5	1.5	1.5
21~50만원	9.3	17.5	11.5	6.5	2.0	8.5	4.5	6.0	18.5	8.5	9.5
51~100만원	9.7	3.5	12.5	3.5	6.5	7.5	7.5	6.0	20.0	10.0	19.5
101~200만원	19.6	1.0	12.5	2.5	13.0	30.0	45.5	34.5	18.0	17.5	21.5
201만원이상	23.4	0.5	10.0	6.0	61.0	23.5	29.5	20.0	13.5	33.5	36.0
무응답	2.3	1.0	2.0	0.5	3.5	2.5	1.0	2.0	1.0	2.5	7.0

전체적으로 예술 활동 관련 수입 100만 원 이하 전체의 2분의 1인 54.9%에 이른다. 예술 활동이 전혀 없는 경우는 26.6%로 2003년 조사의 30.9%보다는 다소 줄어든 경향이 있다. 이는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대한 수입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학부분의 예술인들의 경제적 활동을 분석하면 101만 원 이상 창작활동 수익은 전체 조사에 1.5%이다. 특히 미술부분의 수입이 없는 예술인이 3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03년도 조사시 4%였던 것이 39.%로 증가, 이는 미술 부분의 예술인들의 수입이 현격하게 감소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2. 해외 예술인 지원현황 : 2006년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1) 캐나다의 예술인 지위정책-예술가 지위법

- 전문 예술가들의 세제상 이중 지위, 즉 납세 목적의 자기고용지위와 동시에 실업 보험 및 캐나다 연금플랜 과 같은 고용인 지위도 누릴 수 있도록 권고하여 예술가의 특수한 지위를 확인한 바 있다.
- 그러나 캐나다 예술인들은 세제관련법의 개선, 지원규모의 확대, 기부금의 산비처리범위의 확대, 평균 임금의 확보, 저작권법의 개선 등을 오히려 중요시 여기고 있다.

2) 독일 및 프랑스의 예술인 사회보험 제도

가. 프랑스의 예술인 지원정책

- 예술가들의 지원은 작품 구입, 작품제작을 위한 비용 지원, 작품 활동에 관한 지원,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 프랑스 공연 예술 비정규직 실업급여제도 : 앵페르미팡
실업과 취업을 단속적으로 반복하는 속성을 가진 문화예술 분야 의 직업인들에게 공연(혹은 촬영)이 없는 기간에도 실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의 틀에서 뿐만이 아닌, 생활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누리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적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에 대한 지원
이들의 사회보장을 위한 행정, 창작을 위한 지원, 예술가들 간의 연대를 위한 활동 등을 주요 사명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들에 의해 6년 임기로 선출된 행정위원회를 통해 운영된다.

나. 독일의 사회보장 제도

- 사회보험의 운영을 노사 간 협의 또는 집단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있다.
- 세세한 분류를 통해 다양한 예술의 직업을 보장하고 있다. (400개 직업군 분류)

3. 국내 예술인 지원정책 현황

1) 기본방향

참여 정부 시대의 예술정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유자 중심의 예술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술이 자기 계발과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예술을 생활화하게 함으로써 전 국민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어려서부터 예술을 이해하고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예술을 통한 체험과 표현의 기회를 확대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인간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둘째, 예술의 창조성 증진으로 예술인이 자유롭고 활기차게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초 예술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며, 국제예술계와 교류 및 비주류 독립예술의 지원을 통해 예술계에서의 창의적인 실험을 촉진하여야 한다.

셋째, 예술의 자생력 신장이다. 이는 예술의 창작, 유통, 소비되는 각 단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와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다각적인 수요창출을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며, 지역에서 지역 나름의 고유한 예술이 창작, 유통, 소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열린 예술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율, 참여, 분권 원리에 기반을 두어 국가, 예술현장, 지역사회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예술지원에 투입되는 공공재원이 필요한 곳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 네 가지 기본 정책을 바탕으로 14대 역점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이 표로 요약 할 수 있다.

〈표2-3〉 참여정부 14대 역점 추진과제

4대 기본방향	14대 역점 추진과제
1. 향유자 중심의 예술 활동 강화	1.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 개발
	2.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3. 예술의 공공성 제고
2. 예술의 창조성 추진	4. 장르별 예술창작 활동 지원확대
	5.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 활동 지원
	6. 남북 및 국제예술교류를 통한 예술의 지평 확대
	7. 국립예술 시설
3. 예술의 자생력 신장	8. 예술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강화
	9. 예술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재교육
	10. 예술의 산업적 발전 지원
	11. 개성 있는 지역문화 진흥
4. 열린 예술행정체계 구축	12. 예술지원시스템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
	13. 예술재원의 안정적 확충과 효과적 활용
	14. 예술진흥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제 2 절 예술인 사회 참여 현황

1. 공공미술

1) 커뮤니티 프로젝트

최근 공공미술,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확산에 따라 중앙 및 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관심 고조되고 있으며, 예술의 대중화 및 예술향유의 증대, 도시의 시각 환경 개선을 통한 관광객 유치, 미술가 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예술정책적인 차원 등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는 새예술정책(2004년)의 도시문화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도 시범적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Art in City가 2006년부터 2007년 까지 2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2) 문화예술교육 강사 참가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문화예술교육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는 미션 제시와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함께 마련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종합계획의 근본취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주요사업은 학교문화예술 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기획홍보, 국제교류 등이 있다. 교육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부분의 강사부분에 많은 예술인이 참가 하고 있다.

가. 예술 강사 지원 사업

특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실행하고 있는 예술 강사 지원사업은 200년 이후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등 5개 분야 전문 인력의 학교방문교육을 통한 질적 수준 제고는 물론, 예술 전공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교육 현장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2006년 현재 105억 원(지방비 포함/강사 1,400여명, 2,300여개 초·중·고) 규모의 대규모 지원을 계획,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예술 강사 파견 사업은 사전계획과 사후관리 및 집행과정에 대한 관리 등 여러 개선해야 할 점을 갖고 있다. 예술 강사 선발부터 연수, 그리고 대상학교 파견 후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자체의 내용 발전과 함께 강사 수준을 향상으로 수요자/참여자 중심의 수업전개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표2-4〉 Art in City 공공미술 프로젝트 현황 (2006~2007)

년도	분류	사업명	장소
2006년	공모 사업	원종동 프로젝트	경기 부천시 원종종합사회복지관
		철산동 프로젝트	경기 광명시 철산4동 일대
		마석 프로젝트	경기남양주시 마석 초등학교 녹촌 분교
		대전 홀리스프로젝트	대전 홀리스 지원센터 일대
		해망동 프로젝트	전북 군산시 해망동 일대
		중흥동 프로젝트	광주 중흥3동 마을
		성서공단 프로젝트	대구성서공단
		송산 프로젝트	경남 합천군 송산초등학교
		물만골프로젝트	부산 물만골 마을
		수정동 프로젝트	부산 중합사회복지관 주변공간
2007년	기획 사업	낙산프로젝트	서울 종로구 이화동 일대
	공모 사업	성산아파트 프로젝트	서울 마포 성산 sh아파트
		우각로 프로젝트	인천 동구 우각로
		인덕원 프로젝트	경기 안양 인덕원
		국경없는 마을 프로젝트	경기 안산 국경없는 마을
		아름다움 만들기 프로젝트	경기 가평 아름다움 만들기
		해움 프로젝트	경기 양평 시골 문화학교 해움
		철암 프로젝트	강원 태백 철암역
		대동 프로젝트	대전 동구 대동
		부여 재생 프로젝트	충남 부여 버스터미널
		선린/양지마을 프로젝트	대구 북구 선린/양지마을
		안창마을 프로젝트	부산 동구 안창 마을
		백운면 하안구름 프로젝트	전북 진안 백운면
		담양 5일장 프로젝트	전남 담양 5일장
		신안 경로당 23 프로젝트	전남 신안섬지역 경로당
		서귀포 걸매마을	제주 서귀포 걸매지역 일대
	기획 사업	노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충북 청주 중앙공원 일대

나.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회 문화적으로 소외된 취약 계층에게 지속적 교육 기회로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지원, 노인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취약 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있다.

아동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200여개의 아동 복지시설에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악, 연극, 무용, 영화, 음악, 미술 6개 분야의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예술 강사 활동을 지원한다. 예술 강사는 문화예술교육 및 관련 문화기반 시설을 방문하여 현장 학습을 통한 교육 활동을 한다.

노인·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방자치단체(일부사업)의 주관으로 노인, 장애인(주변인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기관, 문화의 집, 문화예술분야 전문 강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표2-5〉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사업 분류	내용
자유공모 사업	문화예술교육 단체, 기관을 통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화의집 지원	지역 문화의집을 통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 강사 지원	시설 이용 노인,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전문 강사 지원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에게 문화예술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재적을 돕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사로 다른 환경을 이해하는 소통의 방법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방자치단체(일부사업)의 주관으로 농산어촌지역주민, 저소득 가정어린이, 탈학교 청소년, 여성결혼이민자, 새터민, 이주노동자, 소년원학교 학생,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재외동포(중앙아시아 지역)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단체·기관, 문화의집, 문화예술분야 전문 강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표2-6〉 교육관련 공모사업 및 지원

사업 분류	내용
자유 공모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지정과제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계층(교정시설, 군부대, 여성결혼이민자, 새터민, 이주노동자)의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정과제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가능한 단체 지원 - 관련부처(국방부, 법무부 등) 협력 및 정책연구의 결과를 반영하여 과제 지정
	문화의집 지원 : 공모형태로 추진하며 지역 문화의집을 통해 취약계층 대상의 환경을 고려해 개발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예술 강사 지원
	예술 강사 지원 : 소년원학교에 무용, 연극, 만화·애니메이션 예술 강사 지원
	중앙아시아 지역 재외동포(고려인 등)에 적합한 한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2. 도시형 커뮤니티 프로젝트 현황

1) 재래시장

사례분석 : 안양 석수 시장 프로젝트

스톤 앤 워터(관장 박찬웅)는 안양 석수동 재래시장 안에서 생활 속의 문화예술, 지역 미술 운동, 공공미술, 문화예술 운동을 벌이는 단체이다. 지난 5년동안 스톤 앤 워터는 안양에서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예술행위들을 진행했다. 비록 더디기만 하였지만 이 지역의 어린이들,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술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눈과 태도는 분명 바뀌고 있다. 지속적인 프로젝트 진행과 예술가의 상주라는 좋은 모델을 예시한 석수 시장 프로젝트는 앞으로 많은 발전과 결실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된다. 현재 경기문화재단과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여러 기부자들과 기업들의 후원을 모집하고 있고 약간의 성과도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안양 석수시장 프로젝트는 사라진 공동체를 재생시키는 예술의 힘 새로운 공공미술의 힘을 맘껏 발휘한 좋은 예라 하겠다.

- 2008년 8월 석수 아트 프로젝트 개최예정 (축제 형식의 아트 프로그램)
- 2007년 국제 레지던스 작가 프로그램
- 2007년 스톤앤워터 석수시장 교육프로그램 진행
- 2006년 석수시장 프로젝트 가가호호
- 2005년 석수시장 프로젝트

2)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주민의 자치활동과 문화·복지향상 등 지역공동체 형성의 핵심적인 거점으로 조성하여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 12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을 개정하였다. 또한 2005년 11월~2006. 12월까지 간담회·워크숍 개최, 예산지원, 전국 시도 공무원교육원 등을 활용한 교육운영 확대 및 주민자치센터 우수 운영 자료집 발간 전파 등을 통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하였다. 2007년 1월1일 기준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현황을 보면 전국의 3584개의 읍, 면, 동 중에서 72%인 2581개소이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센터는 읍, 면 동 여유 공간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의 문화와 복지 등에 관한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서비스 중 하나인 주민자치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들의 문화적/ 교육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을 목적으로 하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많다. 2만 7585개의 프로그램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절반을 넘는 52.1%를 차지한다. 헬스,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서예교실, 꽃꽂이 등이 주프로그램으로 설계와 이용자 부분에서도 이런 편중이 일어난다. 여가, 오락 프로그램은 대부분 직장에 다니지 않는 여성이나 노년층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프로그램은 상업적 기관에서도 제공하고 있어 자칫 민간부분과 충돌을 유발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무상으로 제공되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도 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주민 자치프로그램의 한 대안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을 단위자치사업계획 프로그램 지원계획은 좋은 사례로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관내 몇 개의 주민자치센터로부터 마을 단위 자치사업계획을 제출받아 몇 개의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광주광역시의 북구청 관내의 문화동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주민자치센터로 평가 받고 있다.

3. 농촌형 커뮤니티 프로젝트 현황

1) 지역개발 지원 사업

정부에서는 지역개발과 농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물리적인 하드웨어 확충을 위한 사업과 문화적인 소프트웨어 창출이 사업의 핵심인 사업도 있다. 사업의 성격상 각 부처와의 연계를 요구하는 사업도 있다. 기존의 마을을 재창조한다는 것은 새로 마을을 만드는 기획조성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사업의 성공에 대한 명확한 해결방법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기존 시행된 사업을 철저히 분석하고 명확한 컨셉 확정을 통해 다양한 기획과 인적 자원을 활용한 커뮤니티 창출사업이 새롭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각 부처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7〉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

사업명	주관기관	내용
농촌마을 종합개발	농림부 농업정책국 농촌진흥과 /한국농촌공사	- 개요 : 농촌마을 경관개선, 기초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 확충 등의 세부사업, 소권역 단위로 개발, 도시인 정주사업이 계획에 있을 경우 가점 부여 - 지원내용 : 1천개권역 6조원 지원
녹색농촌 체험시범 사업	농림부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 개요 : 농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생활과 사업을 매개로 한 도시민과 농촌주민간의 체류형 교류활동을 위한 마을개발, 농업과 2/3차 산업의 연계를 통한 복합사업화 유도 - 지원내용 : 2013년까지 660개 마을에 1천300여억 원의 사업비 투입, 선정 마을 1~2년동안 2억원 지원
농촌전원 마을 조성사업	농림부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 /한국농촌공사	- 입주자 지원형 : 도시민들이 자발적으로 20~49호 마을조성, 부지를 확보해 시군에 신청하면 시군 또는 농촌공사는 입주예정자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추진 - 공공기관 주도형 : 50호 이상의 중대규모 마을을 시/군 또는 농촌공사의 주도로 추진하는 방식 - 지원내용 : 부지확보와 주택건축은 입주자 부담 주택건축비는 4천만 원 한도 3~4%의 저리 융자, 2013년까지 총 300개소의 전원마을 조성 계획, 지난해까지 55지구 착수, 올해 15개 지구가 신규로 추진 총 70개 지구 추진
농촌전통 테마마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지원과	- 개요 : 교유의 전통문화와 생활풍습, 쾌적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도시인에게 농촌에서의 휴식과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을 개발,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개발사업 - 지원내용 : 2008년 완료사업 2002년부터 157개 마을 1,600억 원 예산투입, 마을당 1~2억 원 지원
농촌건강 장수마을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지원과	- 개요 : 노인부양 문제와 관련한 농촌지원사업, 노인건강문제/도내 마을간 네트워크 지원, 보건소와의 연계등 실시 - 지원내용 : 3년간 1억5,000만원 지원 2011년까지 총 800개소 시범 육성
산촌종합 개발사업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 개요 : 산촌지역의 산림 및 휴양자원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인에게 휴양공간을 제공하면서 산촌을 진흥 * 산촌: 전국 읍면 지역 평균인구밀도인 111인/km ² 지역 - 지원내용 : 1996년부터 2008년까지 240개 마을을 단계별로 지원/마을 1개소 당 보조 12억 원 융자 2억 원 (마을당 14억 원)
어촌종합 개발사업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개요 : 낙후된 어촌의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어업소득원을 개발하는 동시에 어촌지역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관광기초기반시설과 건설등 - 지원내용 : 총 사업비 703억 원, 2001년~2007년 497억 원 투자, 전국 1200여개 어촌계를 160개 권역개발, 권역당 35억 지원, 올해 11개 마을 선정
아름마을 가꾸기	행정자치부 지역진흥과	- 개요 : 푸른 환경과 도시적 편익이 조화된 자연 친화적 농촌을 조성하여 높은 소득과 정이 살아 있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재건 - 지원내용 : 2002년 시범사업으로 도별 1개 마을 선정, 마을당 10억 원 지원
소도시읍 육성사업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팀	- 개요 : 읍지 역을 경제/사회/문화의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도시로 육성 - 지원내용 : 2003년 사업시작, 2007년부터 2010년까지 1,757억 원 투입, 선정된 시군은 4년에 걸쳐 총 100억 원의 국비와 10~50억 원의 도비지원
살기좋은 지역만들 기	행정자치부 살기좋은지역기 획팀	- 개요 :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게 만드는 사업, 지자체별 대표 브랜드와 연계되거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고품격 생활마을 조성, 살기 좋은 지역특구 지정 - 지원내용 : 2007~2009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 국가지정 시범지역 30개, 도지정 시범지역 17개 최종 확정
오지종합 개발	행정자치부 지역발전 정책팀	-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상 361개 오지면 중 지역여건과 개발수요를 감안 우선투자대상 지역 선정, 소득 및 생활기반조성, 생활환경 개선, 지역교통 인프라 등 - 지원내용 : 각 관제부처에서 수립한 175건의 연관사업등 661개의 대상사업에 대해 총 3,600여억 원의 예산추진
정보화 시범마을	행정자치부 서비스정보화팀	- 개요 : 도시 및 농어촌 등 정보 소외 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여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지역커뮤니티 형성 올해 31개 신규 선정, 총 337개 마을, 운영 부진마을에 대한 선정해제 등의 운영 내실화 집중, 타 지원사업과 연계 강화, 마을 농특산물 전자 거래, 농촌 체험관광 이용 실적 증가 등의 실적 - 지원내용 : 2002년 도시, 농촌을 향해 20개 시범마을 육성/정보 인프라 시설, 정보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2) 농촌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사례 : EU의 리더 프로그램

가. 개요

1990년을 전후하여 EU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던 ‘새로운 농촌개발 접근방법’에 대한 필요는 당시 유럽 농촌이 맞이했던 전환기적 상황 - 농촌공간에 대한 사회적 요구 변화, 농촌지역의 인구사회학적 재구성, 지구적 차원의 정치경제 환경변화 - 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LEADER는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접근방법들을 표방하며 등장했다. LEADER 프로그램의 새로운 접근방법은 ‘지역(territorial)(1), ‘다부문(multi-sectoral)’, ‘참여(participatory)’의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들어 유럽공동체는 구조정책기금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핵심은 구조정책기금이 “조건불리지역의 낙후성과 여러 지역들 간의 발전 격차를 감소시키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EC Com, 87/100)”는 내용이다. 그리고 1988년 유럽공동체 집행위원회는 ‘Future of Rural Society’를 통해 새로운 원칙에 따른 농촌개발정책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후 1991년부터는 Objective 1과 Objective 5b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LEADER I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실험적인 의도에서 출발했던 LEADER I은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이었지만 EU의 여러 농촌지역에서 성공을 거두었다. 이 시기의 LEADER 프로그램이 거둔 성과를 토대로 EU가 추구하는 새로운 농촌개발 접근방법은 ‘지역’, ‘다부문’, ‘참여’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LEADER I이 종료되고 LEADER II(1994-1999)가 진행되던 무렵인 1996년, Cork 선언(2)에서는 이 ‘새로운 접근방법’이 다음과 같이 확고하게 언명되었다.

“농촌개발 정책은 명료한 지역적(territorial) 차원을 유지하면서, 개념적으로는 다학문적(multi-disciplinary)이어야 하며, 적용에 있어서는 다부문적(multi-sectoral)이어야 한다. ... (중략) ... 설계와 추진 과정에 농촌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자문을 얻어야 할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과 평가에도 그들이 참여해야 한다(Commission, 1996, p.2.).”

LEADER II는 LEADER I을 통해 그 성과가 입증된 내생적 발전(enodogenousdevelopment) 모델을 확대 적용시키는 단계였다. LEADER II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 EU 회원국들에서는 정책지원 대상자 선정 작업의 지연, 참여자들 간 파트너십의 불안정, 불투명한 진행과정, 과도한 사업단위 지원으로 인한 정책효과의 저하 등등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European Commission, 2000), LEADER 프로그램이 보여준 긍정적인 이미지와 성과는 놀랄 만한 것이었다.

EU는 2000년부터는 LEADER +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제는 대상 지역이 EU의 모든 농촌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예산 또한 대폭 증액되었다. 이는 LEADER가 제시하는 모델이 실험적인 성격을 뛰어넘어 EU의 대안적인 농촌발전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 . LEADER 프로그램 개관

○ 추진체계

LEADER 프로그램의 추진체계는 수직적으로는 지방 활동그룹(Local Action Group/LAG), 국가나 지방정부가 위임한 중간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 / IO),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DG for Agriculture)이라는 세 층위 간의 파트너십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평적으로는 사업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 수직적 파트너십

LAG은 LEADER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로서 농촌 현장에서 진행되는 LEADER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주체이다. 해당 지역의 공공 및 민간부문 인사들의 파트너십을 기초로 조직된다(3). LAG의 실무진은 조직 활동과 운영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co-ordinator)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하고 현장정보를 수집하는 애니메이터(animator)들로 구성된다. LAG은 사업계획(business plan)을 꾸며 제출하고 EU집행위원회가 그것을 승인하면, LEADER가 제공하는 재정 및 활동상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

IO는 LAG이 위치한 국가의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LEADER와 관련된 사무를 위임한 공공기관이다. IO가 반드시 EU 회원국 중앙정부일 필요는 없으며,

국가마다 상이한 지방분권화 정도와 법체계가 규정하는 LAG의 법률적 지위에 따라 그 유형은 달라진다. IO는 관련정보 수집 및 분석, LAG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선진지역의 경험과 정보 교류 촉진, 지역 및 국가 간 협력활동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사업계획 검토 작업과 EU로부터 지원되는 자금의 지출이나 관리에도 부분적으로 참여한다.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은 사업계획의 검토 및 승인, 재정지원, 모니터링과 평가, LAG 활동에 대한 기술적 지원, 지역 및 국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맡으며, LEADER 프로그램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사업계획 승인과 재정지원을 제외한 여러 기능들은 외부기구에 위탁한다.

이러한 수직적 파트너십의 특징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구조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촌현장의 주민들로 구성된 LAG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진행 전 과정을 책임지며, 상층부의 단위(중앙 및 지방정부와 EU 집행위원회)는 사업승인과 지원에만 그 기능을 국한시키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마다 형성되어 있던 기존의 획일화된 농촌개발 정책 메커니즘의 통제와 간섭을 덜 받고, 각 지역의 고유의 상황에 적절한 혁신적인 사업들을 창의적으로 계획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수평적 파트너십

방대한 지역에서 수많은 개별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LEADER의 추진체계가 지니는 강점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LAG들 간의 경험이나 정보를 교류하고 조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EU 집행위원회로부터 그러한 기능을 위탁받은 민간기구인 ‘지역개발을 위한 유럽 정보연합(Association European d’Information sur le Development Local, 이하 AEIDL로 줄임)’이 LEADER에 참여하는 모든 기구, 조직들 간의 중심에 위치하여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지원과 조정기능을 수행한다. AEDIL은 농촌개발 관련 연구자들과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LAG에 대한 기술적 지원, 관련 정보 수집, 분석, 전파, 세미나 및 포럼의 조직과 지원, EU 집행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공식 문서 및 보고서 작성, 일반 대중들에 대한 LEADER 프로그램 홍보, LEADER 프로그램을 위한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AEIDL은 개별 LAG들이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격려하며, 이들에게 풍부한 기술적, 조직적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매우 인상적인 ‘전문가 풀’을 형성하고 있다.

○ 재정 집행

LEADER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자금은 EU의 구조정책 자금과 민간투자 자금으로 구성된다. 공공부문 대 민간부문 투자비율은 국가에 따라 그리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7 대 3 정도이다.

LAG의 사업계획이 IO의 검토를 거쳐 EU 집행위원회에 제출되면 지역, 사업계획의 타당성, LAG 구성상태의 세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LEADER+의 대상 지역은 인구 1만에서 10만 사이의 EU 역내 모든 농촌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은 통합주제와의 일치성, 지역사회 주민들에 미치는 효과, 지역 특성과의 일치성, 사업의 실험적(혁신적) 성격, 독자적인 추진방법을 타 지역에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 LEADER 외의 기타 구조정책들과의 상호보완성 등 여섯 가지 측면에서 평가된다. LAG 구성과 관련해서는 공공/민간 부문의 인적 구성비, 조직의 내부 구조, 행정적재정적 역량이라는 세 측면에서 검토된다. 사업계획이 최종적으로 승인되면 EU 집행위원회는 IO에 사업예산 지출 승인을 통보한다.

LEADER의 지원금은 세 번에 걸쳐 LAG에 지급된다. 1차 지원금은 전체 금액의 40% 정도이며, 사업계획 승인 직후에 지급된다. 2차 지원금은 LAG이 해당 IO에 1차 지원금 지출명세서를 포함한 중간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받은 후에, 1, 2차 지원 금액 합계의 8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3차 지원은 EU 공동재정의 국가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이루어진다. 3차 지원은 IO가 담당하고 있는 모든 LAG들에 대한 최종 보고와 지출명세서를 EU 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뒤에 이루어진다.

LEADER의 예산을 구성하는 구조정책자금은 EAGGF, 유럽 사회기금(European Social Fund, 이하 ESF로 줄임),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이하 ERDF로 줄임)로 구성된다. 서로 다른 재정체통을 통해 정책자금이 집행되고 있으나 EU는 이들을 통합한 LEADER 프로그램만을 위한 단일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정과 관련된 각각의 책임기관들은 독자적인 규정에 따라 움직인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LAG이 상이한 여러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통제를 받기도 한다.

○ 사업내용과 평가

LEADER의 개별 사업들은 그 내용 면에서 매우 다양하다. 대략 농촌개발활동 지원,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 및 지원, 농촌관광, 중소기업, 수공업, 농촌지역 서비스업 지원, 농산물 마케팅 등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예산 측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농촌관광 분야이며, LEADER I 프로그램의 경우 농촌관광이 차지하는 예산 비중은 45% 정도이다. 이렇게 사업내용이 다양한 까닭은 LEADER가 견지하는 지역 접근방법과 참여 접근방법에 있다. 모든 사업들은 농촌현장의 LAG이 자율적으로 기획하며, 각 사업들은 해당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지역상황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진단에 기초한 각 사업들은 전체적으로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LEADER의 모든 사업들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에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창출했는가 하는 점이다. LEADER I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보고서에는 관련 프로젝트들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가 여러 지표들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LEADER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는 이유를 알 수 있다. 특히 LEADER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농촌에서의 고용효과와 농촌의 중소기업들에게 미친 영향에 관한 자료들은 매우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LEADER I은 사업 건 당 평균 100여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촌 기업에 미친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데, 특히 사업 건 당 평균 25개 이상의 신규 경영체 설립을 유도했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고용을 위한 직업훈련과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들의 참여자수는 LAG 당 평균 250명, 총 5만 5,000명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EU 집행위원회 농업총국의 언급처럼 LEADER는 ‘매우 현대적인 프로그램, 사실상 돈이 들지 않는 프로그램이다 (Heino van Meyer, 1997).’ 시설투자 등 하드웨어 구축을 위주로 하는 여타 정책 프로그램들과는 달리 계획, 추진, 평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지역의 인적 자원과 사회적 자본 활용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특징들은 농촌현장에서 전개되는 LAG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더욱 잘 드러난다.

제3절 . 예술인 해외파견 현황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현황 (2007년 경영실적)

- 단위 사업명 :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1) 문화예술국제교류지원

가. 사업개요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 및 해외 문화예술의 국내 소개 등을 위한
전사공연교류세미나개최 등 문화예술 국제교류를 지원

나. 주요추진실적

〈표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추진 실적

분야	지원결정	지원건수	예산	집행액
문학	9	3	120,000	39,000
시각예술	68	29	880,000	394,000
연극	24	14	390,000	230,000
무용	24	11	420,000	186,000
음악	27	11	420,000	178,000
전통예술	24	11	430,000	193,000
문화일반	19	10	262,200	147,700
계	195	89	2,922,200	1,367,700

(단위 : 천원)

다. 평가

- 금년 상반기 ‘문화예술국제교류’ 분야의 사업은 지원 사업 진행 시 최대한 단체와 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컨설팅 등의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였고, 사업종료 후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정보 공유의 과정을 거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현장평가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원사업의 효과를 가늠하여 보도록 노력하고 있음.
- 상반기 지원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음.

2) 베타니엔 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지원

가. 사업개요

현대 시각예술작가에게 1년간 독일 베타니엔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지원하여 작품 창작 공간 및 전시기회를 제공하고 세계 예술계에 소개될 수 있도록 지원

나. 주요추진실적

- 대 상 자 : 이 문 주
- 참가기간 : 2007.3.15-2008.3.14
- 예 산 액 : 64,826,000원
- 집 행 액 : 12,968,312원

3)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참가지원

가. 사업개요

국제 유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한국작가를 파견하여 다양한 국제적 예술가 그룹과 같이 체류하며 참여 예술가의 국제예술조류에 대한 노하우 축적 및 인적교류를 도모

나. 주요추진실적

〈표2-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 추진 실적

분야	지원결정	지원건수	예산	집행액
문학	3	1	28,000	7,000
시각예술	8	6	98,000	53,803
연극	1	0	9,000	0
무용	2	1	15,000	5,000
계	14	8	150,000	65,803

(단위: 천원)

4) 라익스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가지원

가. 사업개요

네덜란드 라익스 아카데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총2년간 참가하도록 지원하여 작품창작 및 해외 예술가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

나. 주요추진실적

- 대 상 자 : 함양아, 손광주, 송상희
- 참가기간 : 2007.1.30-2007.12.31
- 예 산 액 : 45,000,000원
- 집 행 액 : 18,803,000원

5) 국제기구 가입단체 활동지원

가. 사업개요

세계주요 문화예술 비정부기구에 가입되고 있는 국내 예술단체들에 대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우리 예술의 영향력제고와 활동을 진작하고자 하는 사업

나. 주요추진실적

- 총 2개 사업지원
- 예산액 : 50,000,000원
- 집행액 : 30,000,000원

다. 자체평가

현장의 수요에 의해 마련한 국제기구가입단체 활동 사업의 내용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여 금년 단 2개의 사업만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

하지만, 상반기에 지원된 사업인 아시테지의 ‘아시아아동극연합’ 사업은 우리 예술단체가 주도하여 아시테지의 회원국들을 초청,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 냈으로써, 본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 문화예술단체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성황리에 진행되었음.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

1)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가. 사업개요

○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베니스비엔날레 미술전에 한국작가 참가를 지원하여 한국 현대미술을 세계에 알림

○ 전 시 명 : 제52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 개요

(The Venice Biennale 52th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 총 감 독 : 로버트 스톤 (미국, 예일대 교수)

○ 전시장소 : 베니스시 비엔날레 공원(Biennale Gardens), 아르세날레 (Arsenale)

○ 전시주제 : “Think with the Senses -Feel with the Mind, Art in the Present Tense” (감각으로 생각하고, 영감으로 느끼라-현재 시제로서의 예술)

○ 시 사 회 : 2007년 6월 6일 ~ 6월 9일

○ 전시일정 : 2007년 6월 10일 ~11월 21일

나. 주요추진실적

○ 한국관 전시

○ 커미셔너 : 안소연 (1961, 리움 삼성 박물관 학예실장)

○ 참가작가 : 이형구 (1969, 홍대 조소과, 예일대 대학원 졸)

- 한국관 전시주제 : “The Homo Species”
- 개막일시 : 2007년 6월 8일
- 장 소 :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앞 (이태리 베니스 비엔날레공원)
- 주 최 : 우리 위원회, 커미셔너
- 참석대상 : 조직위 및 각국 관계자, 국내외 예술계 인사, 관련 기자 등 150여명

2) 해외민간문화단체교류 및 해외정보서비스

가. 사업개요

세계 주요 문화기관과의 정기적인 인사교류 및 문화예술교류 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 해외교류 거점을 확보

나. 주요추진실적

- 예산액 : 401,048,000원
- 집행액 : 29,536,883원
- 해외주요문화기관교류사업

다. 해외문예정보 서비스

생성한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계 소식을 선별하여 매주 주간뉴스레터 ‘해외문예소식’ 란을 통해 총 7,600개 발송 처에 제공하여 언론계 및 일반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음.

라. IFACCA 아시아지역회의 참석

- 회의개최국 및 장소 : 몽골 울란바트라시 내 징기스칸 호텔
- 회의일정(4박 5일) : 2007.7.28(토) ~ 8.01(월)
- 참여기관 별 협력방안
- 각 회원국 간 예술지원정책에 관한 자료집 제작 건
- 각 회원국 간 예술옹호정책에 관한 3개년 사업 제안 건
- 차기 아시아지역회의 개최 건

- 주요 추진 업무 및 협의내용
- 아시아지역회의 차기 개최국 타진에 따른 협력의사 논의
- 아시아지역회의 이사국으로 참여 의사 논의
- 아시아지역회의 공동사업에 적극 참여의사 논의
- 아시아지역회의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회원국 간 ‘예술지원정책핸드북’ 제작 사업에 적극 협력기로 함
- 아시아지역회의가 향후 3년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예술옹호’ 관련 사업 계획 마련에 적극 참여기로 함
- 싱가포르예술위원회와의 MOU(협력약정) 체결의사 논의
- 몽골예술위원회와의 신규 공동프로젝트를 ‘가칭 고비예술가프로젝트’로 잠정하고 향후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하기로 함
- 중국문련 대표단과 금년 9월 중국 소주 등에서 개최될 ‘국제민속예술축제’ 참여논의

마. 몽골예술위원회 기관교류

- 방문기간 : 2007.07.06-2007.07.13(7박8일)
- 방문단 : 위원회 대표단 5인
- 방문기관 및 간담자 : 몽골문화과학교육부, 몽골예술위원회, 몽골 울란바트로시청 문화과, 몽골미술가협회, 몽골문화예술대학, 몽골문화유산센터, 주 몽골 한국대사관 박진호 대사 등
- 2008년 신규프로그램 “(가칭)노마드 예술가프로젝트” 소개 및 공동추진방안 협의
- 몽골 예술위원회와 향후 상호 인적교류 및 사업협력 교류 방안 논의
- 직원 인턴 교류 가능성 타진
- 몽골 문화과학교육부 등 몽골 내 주요 문화예술기관 방문 및 향후 양국간 문화교류 방안 협의
- 국내 관련 문화기관 간의 교류 활성화 방안 토의
- 몽골 예술대학 등 예술관련 전문학교 방문
- 젊은 예술가 교류방안 협의

2. 문화체육관광부

1) 국제문화협력과 :

〈BRICs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국가 문화교류 확대〉

가. 목표

브릭스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에 따라 문화교류 및 상호이해 기반 강화

나. 기대효과

브릭스 국가와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한류 확산, 문화산업 진출 강화

다. 주요내용

- BRICs 정부합동대책반 참가
- 브라질 등 중남미 문화교류 지원
- CIS지역 전통 예술단 및 청년문화 봉사단 파견
- 중국 문화교류 지원
- 러시아문화교류 지원
- 인도문화교류 지원

라. 추진배경

- 아르헨티나 및 중국문화원 개원 공연
- 북경문화원 한국어 강좌 강화
- 2006년 국립발레단 중국 북경 공연
- 청년 문화 봉사단 파견
- 러시아한국현대무용 소개

2) 공연 예술팀

가. 지원 원칙

- 공연의 필요성, 적정성 등을 “해외공연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 공연의 규모, 기대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지원액 산정
- 공연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정책 자료로 활용

나. 해외공연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해외공연에 대한 예산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규모에 대한 심의
- 기타 해외공연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검토

다. 지원기준

- 세계 유명극장 초청 공연으로 외국에서 비용의 일부를 부담 (공연장 무상제공 등 포함)하는 작품
- 국제 규모의 주요 페스티벌 참가 공연
- 국내·해외 단체가 공동제작하고, 교환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
-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전략적으로 기획된 공연(재외공관 요청 공연 포함)
- 한국 관광 이미지 제고 및 외래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실시공연
- 기타 국가이미지 제고 및 공연예술 작품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공연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3. 외교통상부 국제교류 현황

1) 문화 외교국 활동

가. 문화협정

- 문화협정은 통상 2개 국가 간 문화관계 전반에 대한 교류와 협력의 증진에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 양국 간 문화협정이 체결·발효된 이후 일반적으로 문화교류계획서(Cultural Exchange Programme)를 체결하여 2-3년 단위로 향후 문화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문화교류를 시행함.
- 2007.9월 현재 문화협정 체결국수 : 총 94개국 서명
- 교육·학술 분야 협력, 문화·예술 교류, 체육·청소년 교류 매스미디어간 협력, 과학·기술 분야 협력 (상대국에 따라 예외적으로 포함)

나. 문화공동위원회

○ 개요

문화협정이 체결·발효된 이후 문화협정상규의 규정이나 양국 간의 별도합의에 따라 문화외교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 간 문화공동위원회를 설치, 운영함. 2-3년마다 양국이 교대로 문화공동위 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간 문화교류·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통상적으로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 시행하게 됨.

다. 공연예술자문위원회

○ 설립목적: 문화교류를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와 주요 외교행사의 성과 거양을 위하여 외교통상부가 지원하는 민간예술단체 해외공연 파견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2002.7)

○ 기능 : 외교통상부가 지원하는 민간예술단체의 해외 공연사업 지원 대상 심사, 선정, 사후 평가에 대한 자문, 외교통상부 및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추진하는 주요 대외 문화교류 사업 관련 의견 제시, 여타부처 추진 해외공연 행사에 대한 자문, 거시적 문화외교 정책과 수행 방향에 대한 자문, 기타 동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에 대한 자문

4. KOICA 해외파견

1) 사업시행절차 주요내용

가. 수원국 정부와 사업 발굴 협의

- 중기전략 및 국별 원조 전략 등을 토대로 무상원조사업 발굴협의
- 수원국 빈곤 감소전략, 국가개발계획상의 개발과제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적정사업 발굴
- 사업발굴은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연중 실시
- 재외공관, 사업발굴협의단, 주요외교행사 계기 등을 통해 사업 발굴

나. 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의 공식사업요청 접수

- '사업발굴협의' 단계를 통해 형성된 사업에 대하여 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의 공식사업 요청서(Project Request Form)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

다. 수원국 공식 요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수원국 공식사업요청서를 일차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분류
- 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청사업에 대해 조사단파견 등 지원적정성에 대한 타당성조사 실시 (조사과정에서 사업내용을 수정·보완)

라. 사업예비선정(사업심사위원회)

- 타당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경제적, 기술적, 재정적, 환경적, 사회적 측면 등에 대한 심사 실시
- '사업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예비선정

마. 사업내용확정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수원국과 사업세부내용 협의
- 사업세부내용 및 부담사항 등을 명기한 협의의사록 (R/D, Record of Discussions) 체결
- R/D 내용상, 합의된 내용은 반드시 양국정부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

다는 조건이 포함되도록 작성

바. 정부 간 합의

- 양국 시행기관 간에 합의된 협의의사록(R/D)을 정부차원에서 공식 확정하기 위한 양국 정부 간 합의실시
-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또는 해당국 사정 및 외교적 이유 등으로 정부 간 합의에 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양 기관 합의에 의해 시행)

사. 사업시행자 선정 및 사업진행

- 정부 간 합의 완료 후, 사업집행계획 확정 및 사업시행자 선정 등 사업 착수
- 사업집행 단계는 ①집행계획수립, ②사업시행자선정 및 계약체결, ③사업집행 및 모니터링, ④사업종료 순으로 진행

아. 사업평가

- 프로젝트 평가는 프로젝트의 계획수립, 집행 및 성과를 평가하며, 평가시기에 따라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제3장

예술인 참여를 통한 도농 활성화 방안

제1절 : 사업 목표 및 이행 과제

1. 목표
2. 이행과제

제2절 : 예술인 농촌 정착 사업

1. 목적
2. 기대효과
3. 현황분석
4. 사업개요
5. 추진 방식 및 절차
6. 유형별 구분
7. 예산

제3절 : 예술인 도시 활력화 사업

1. 개요
2. 추진배경과 목적
3. 추진방향과 목표
4. 프로세스
5. 시범사업

제4절 : 예술인 해외파견사업

1. 목적
2. 기대효과
3. 현황분석
4. 사업개요
5. 추진 방식 및 절차
6. 유형별 구분
7. 예산

제1절 . 사업 목표 및 이행과제

1. 목표

본 연구서의 1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그랜드 플랜의 연구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3-1〉 그랜드 플랜의 연구 목적

목표1. 예술인과 사회의 소통구조 확립

목표2. 예술의 공공부문 강화 대중과의 접근성을 강화

목표3. 실질적인 기획사업 지원으로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의 다양화

목표4. 예술인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

2. 이행과제

상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그랜드 플랜 기획 사업은 크게 세 가지의 단위사업으로 분류 한다.

첫째, 예술인 농촌 정착 사업

둘째, 예술인 도시 활력화 사업

셋째, 예술인 해외 파견 사업

또한 각 단위사업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사업의 실행은 참여 예술인의 장르와 개인 성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 되었다.

〈그림3-2〉 그랜드 플랜의 이행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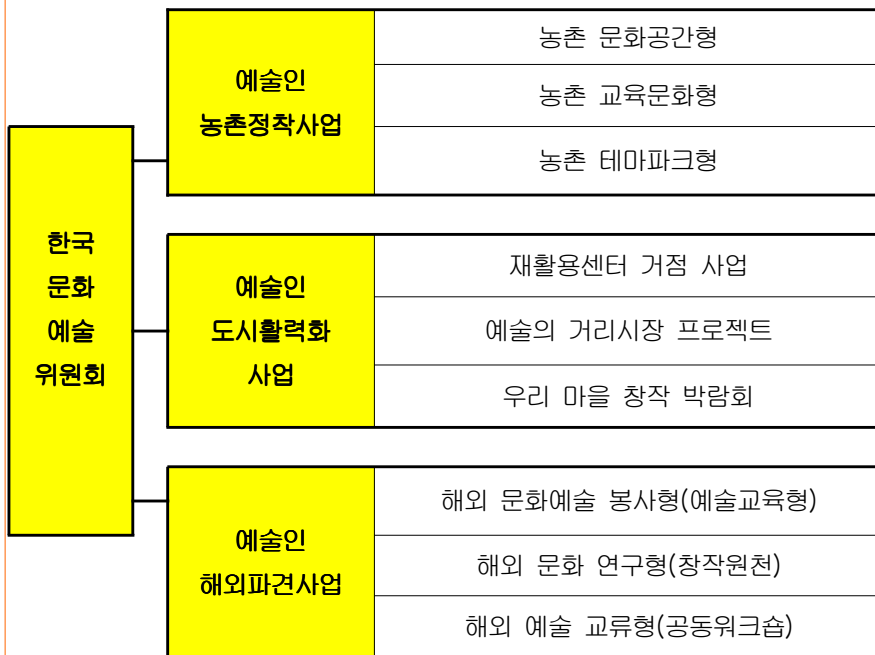


표 12

제2절 . 예술인 농촌 정착 사업

1. 목적

- 예술가에게는 안정적 창작 조건을, 농촌지역에서는 창조적 인력을 확보하여 예술가 복지와 농촌의 문화 인력 문제를 해결하는 win-win 사업
- 주민/시민의 접촉면에서 새로운 창작의 계기를 마련하여, 생활세계와 예술의 결합을 만들 수 있는 창작 활성화의 기반 구축
-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자치부, 농림수산부와 사업 모델 공동 개발을 통해서 예술인 창작 이주 사업 실행

2. 기대효과

- 예술가들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능동적 예술인 복지 실현
- 예술창작인의 문화적 귀농을 통한 농촌 지역의 교육, 문화 문제를 해결, 특히 인력 문제 해결
- 농촌/소도시형 지자체에서 의욕적으로 공공디자인, 마을 재디자인, 생활문화공간, 농촌테마파크 사업 등 문화 관련한 사업들의 실행주체로 예술가가 참여함으로써 문화적 예술적 성과를 높임

3. 현황 분석

- 농림수산물부의 <신활력사업>의 사업목적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혁신역량을 키우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양성, 교육 및 소득창출사업 등을 주로 지원하여, 지역의 내생적·자립적 발전기반’으로 기존의 지역개발 사업과 차별화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존 과거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음.
- 박물관, 미술관 등 대단위 문화시설 건설에 대한 정책적 실패로 인력중심적이고 창의적인 정책 마련에 공감대 형성.
- 행정자치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 농림수산물부의 도농교류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정주권개발 사업 등이 상품개발, 관광을 통한 경쟁력 강화차원이나 시각 환경 개선 차원에 머무르고 있음
- 인력 개발 및 문화적 개발에 대한 전망이 부재한 상황. 정책 단위에서 문화적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서서히 인식하고 있는 시점

국내 사례	<p style="text-align: center;"><하동군 문화예술분야 귀농 정착 지원 방안 추진></p> <p>하동군은 귀농자들의 정착을 도와주려 2006년 귀농정착 빈집수리비 1억 5천여만원(19명)에 이어 지난해 1억4천500여만원(18명)을 지원. 하동에 찾아오는 귀농인들에게 농업뿐 아니라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지원방안도 검토 중.</p> <p>(2008.3.23. 연합뉴스 기사)</p>

- 해외 유학이나 졸업 후 도시권이나 도시 주변부에서 살고 있는 예술가중 낭만적인 전원주의부터 시작해서 생태예술까지 부유하는 다양한 예술가들이 존재. 90년대 생태문학의 발원 후 많은 문인들이 농촌 지역에 정착한 것처럼, 시각/공연/미디어 예술가들도 농촌 이주가 가능한 시점에 와있음

해외 사례	<p><영국 Artist Teacher Residence Program></p> <p>일정 시간 동안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본으로 한 해외레지던스 프로그램</p>
-------	--

4. 사업 개요

○ 참여자격 : 일정한 범퍼링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가진 예술인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역이주를 희망하는 자

○ 사업단계

2009년 : 시범사업으로 10 여 곳 실행

2010~2011 : 유형화하여 매년 50여 지역에 250여명의 예술가 이주

2012~ : 매년 200여 지역에 1000여명의 예술가 이주

○ 사업 내용

- 1) 예술인이주 범퍼 프로그램(5배수)
- 2) 커뮤니티 문화공간 및 창작 공간에 대한 지자체 협력 구축
- 3) 이주예술가 최종 선발
- 4) 문화공간 리모델링, 지역프로그램, 예술교육, 공공프로젝트 실행
- 5) 창작 작업에 대한 프로모션 시스템

○ 사업 유형

- 농촌 문화공간형(읍내, 면소재지)
- 농촌 교육문화형
- 농촌 테마파크형

5. 추진 방식 및 절차

1) 예술인 공모

- 농촌지역 일시적/장기적 이주를 원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공개 공모
- 5배수 선발하여 경쟁후 최종 선정
- 이주한 예술인에게 활력을 주기 위한 해외/국내 레지던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 병행. 일정 규모의 예술 창작인이 정주할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1인의 공공예술 프로그래머도 이주 프로그램에 포함

2) 예술인 범퍼 프로그램

- 5배수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3개월여 정도의 프로그램 예술/공간/인문/마을 워크숍 이수
- 예술가의 장르, 성향, 철학 등을 고려하여 농촌 지역과 매칭
- 귀농, 문화, 인문, 커뮤니케이션, 예술교육 관련 강사 교육 및 체험 교육

3) 지역 선정

- 예술인 이주를 원하는 지역에 대한 선정
- 선정조건 : 문화공간 또는 작업공간, 거주 공간 제공 여부 및 지원 여부
- 대상지역 선정 및 실행은 신활력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 인력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지역, 귀농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 지역, 귀농자센터 등 귀농자들의 모임이 활발한 지역, 방문자센터/전통테마마을 등 기존의 사업으로 문화 공간 형성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

4) 이주예술인 최종 선발

- 제공된 지역 정보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실행 계획 제출,

- 최종 심사를 통해서 선정
- 한 지역당 3인~5인을 그룹으로 이주를 할 수 있게 함

5) 이주예술가 프로젝트 실행

- 일시형(6개월), 장기형(1년)으로 나누어 이주 후 예술가 활동
- 읍내/면소재지/마을 등으로 나누어 1 지역 당 3가지 층위에서 예술인을 이주. 창작인들 간의 상호역할 분담 및 네트워크 등은 워크숍을 통해서 통합성을 가져야 함.
- 소도시/읍내에 문화공간 조성 및 작업스튜디오 지원을 병행하고, 일정 시간동안 예술가는 지역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문화공간 운영, 지역 문화프로젝트 참여 등의 미션을 실행

6) 이주예술가 워크숍

- 1년 1회씩 3박 4일 동안의 워크숍
- 이주 예술가들을 다양한 전시/공연/설치 공간과 연계 창작 활성화
- 창작 프로모션 시스템

6. 유형별 구분

1) 농촌 문화공간 재생형

- 지자체가 제공하는 읍내/면소재지에 있는 다방, 빈점포, 주민센터 등의 공간에 대한 컨셉을 정하고 내외부 리모델링
- 예술가는 문화 공간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예술인, 문화종사자와 교류
- 5인의 예술가가 각각의 컨셉에 맞는 문화 공간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되, 작업 공간은 공동으로 이용하여 자율성과 통합성 극대화(2~3개 공간)
- 예를 들어, 음악커뮤니티 공간, 미디어 공간, 시각예술 공간으로 특성화하여 교육적 요구에 대한 조응(지역마다 핵심 대상은 차별화)
- 커뮤니티 문화예술공간을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 실행

2) 농촌 교육문화 레지던스형

- 지자체는 예술가의 창작 공간을 제공. 창작과 교육의 병행
- 예술가는 지역 학교, 문화의집,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박물관 등과 연계하여 지역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 예술가의 창작 공간에서 주기적으로 지역 주민 프로그램 실행

3) 농촌 전통 테마파크 재생형

- 기존의 농촌형 전통테마마을 사업이 이미 실행된 지역에서 예술가 공간 제공
- 전통테마마을 성격에 맞는 예술가가 이주하여 다양한 예술프로그램 실행
- 창작 공간 제공

7. 예산

- 이주예술인에게는 공간구축비, 생활비, 창작비, 프로젝트 비용 책정
- 공간은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임대료가 있을 경우 프로젝트 비용 책정
- 예술가 거주공간 및 창작공간은 지자체에서 리모델링

- 예술가 범퍼프로그램 및 지역 매칭 4억
- 예술가 체재비 및 생활비1200만(6개월기준)
- 프로젝트비 2000만(6개월기준)

〈표3-1〉 예술인 농촌 정착 사업

년도	예산 산출	합계	연인원
2009년	예술가 범퍼프로그램 및 지역 매칭 4억 예술가 체재비 및 생활비1200만 x 50명 = 6억 프로젝트비 2000만 x 50명 = 10억	매년 20억	100명
2010 ~2011	예술가 범퍼프로그램 및 지역 매칭 8억 예술가 체재비 및 생활비1200만 x 250명 = 30억 프로젝트비 2000만 x 250명 = 50억	매년 88억	250명
2014 ~2010	예술가 범퍼프로그램 및 지역 매칭 12억 예술가 체재비 및 생활비1200만x1000명 =120억 프로젝트비 2000만 x 1000명 = 200억	매년332 억	1000명

제3절 . 예술인 도시 활력화 사업

1. 개요

- 사 업 명 : 예술창작인 도시 활력화 사업
- 사업기간 : 2009년 1월부터
 - 1단계(3년) : 활력화를 위한 거점 문화 공간 개발 및 모델개발사업
 - 2단계(3년) : 붐조성과 거점 확대 및 모델 확산
 - 3단계(3년) : 운영 안정화 및 사업 활성화
- 사업대상 및 장소
 - 도시 내 생활공간 중 예술인의 참여로 문화 공간화 또는 지구화될 조건을 갖춘 거점
 - <(가칭) 예술인 창작 거점 공간 제안 공모전>과 <사례 워크숍>을 통해 거점 공간 최종 선정
 - 예상 거점공간
 - 지역센터 : 재활용센터, 주민자치센터
 - 동 단위 마을 : 주택가형, 아파트형
 - 도시 재래시장 : 상가형, 골목형, 유목형
 - 도심공원 : 수변공원, 도심공원, 테마공원
 - 기타 거리, 광장 등
- 소요예산
 - 1단계(사업 모델화 단계) : 3년간 총 120억 원
 - 예술인 창작 거점 공간 제안 공모전
 - 3개 거점공간별 3개 사업모델개발 => 총 9개 모델개발비
 - 사례관리 및 연구개발비
 - 2단계(모델 확산 단계) : 3년간 총 120억 원

- 거점공간별 10개 지역까지 확대(초기 모델화 공간 포함)
 - 새로운 거점 공간 개발
 - 3단계(안정화 단계) : 3년간 총 120억 원
 - 거점공간별 20개 지역까지 확대
 - 평가를 통해 기존 공간 50% 탈락, 신규 거점 공간 50% 확충
- ※ 사업추진단계에 따라 거점공간별로 자생성을 높여가기 때문에 예산의 확대는 없음.

2. 추진배경과 목적

○ 추진배경

- 삶의 문화적 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생활공간을 문화공간화 하는 사업
-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내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예술 영역 개발의 필요
- 지속가능한 창작을 위한 예술인의 ‘창조적 일자리 창출’의 필요
- 위원회의 철학과 이념이 반영된 지속가능한 공공예술사업 마련

○ 목적

- 기존 문화시설(공연장, 전시장)외 새로운 도시 생활공간을 통한 문화예술 커뮤니티공간으로 개발 운영 활성화하여 도시를 활력화함.
- 예술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치유’, ‘재생’, ‘소통’의 특성)

3. 추진방향과 목표

○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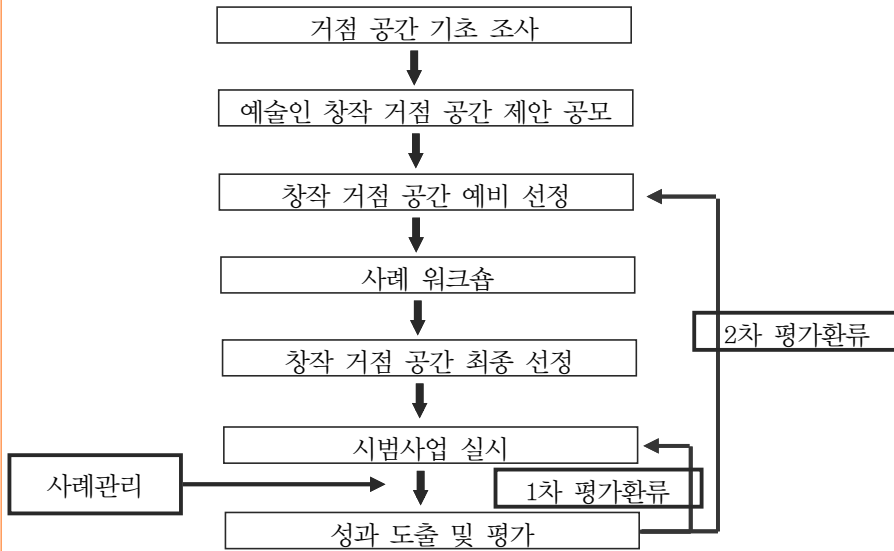
- 도시 내 생활공간 중 하드웨어가 비교적 갖춰져 있고, 예술인의 개입으로 문화 공간화 또는 지구화될 조건을 갖춘 곳을 거점화 함.
- <〈가칭〉 예술인 창작 거점 공간 제안 공모전〉 등 창작자의 제안을 받아 거점 공간을 예비 선정함.
- 제안이 선정된 작가들과 사례 워크숍을 통해 거점 공간을 최종 선정함
- 3년간의 모델링 단계에서는 위원회 산하의 ‘거점 공간 모델링과 운영 전담팀’을 구성하여 직접사업으로 추진함.
- 지역의 자발성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함.
- 지역 커뮤니티 생성과 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 창출을 지향함.

○ 목표

- 초기 3년간 시범 사업 공간별 각 3개소를 지정하여 사업모델화 한 후 운영 평가를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 사업 영역별로 3년 내 1개소 이상의 100%재정자립 모델 창출
- 사업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과 글로벌 네트워킹

4. 프로세스

〈그림3-3〉 예술인 도시 활력화 사업 프로세스



5. 시범사업

1) 재활용센터 거점 사업

“Re-Cycling센터를 Re-Modelling해서 지역을 Re-Vitalizing한다”

○ 사업명 : 재활용 ‘문화’ 센터(Recycling Artist Village)

○ 배경

- 전시관, 공연장 등 전통적인 문화시설과는 다른 형태의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공간 모델의 창출이 필요.
- 지역 재활용센터의 경우 전국적으로 공간적으로 대규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만 기능적으로만 재활용된 의자, 장롱, 냉장고,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의 판매장 역할만을 담당하고 있는 편이고, 재활용 물품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지 활용도가 높지 않은 관계로 예술적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프라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목적

- 치유, 재생, 소통을 컨셉으로 하는 문화 예술적 지역 커뮤니티 구축
- 예술을 통해 전국에 분포한 지역 재활용센터의 문화공간화
- 재활용센터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과 생활예술 커뮤니티 조직 및 지역 활성화
- 예술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관련법령 및 현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환경부 관할) 시행 중
- 위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재활용센터의 전국 총 수는 380개소이나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재활용센터는 104개소(민간위탁운영 포함)에 불과
-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재활용센터 731개소를 포함할 경우 835개소로 법적 의무

대상 시설 수 충족 가능하나 대부분 법적 기준 미달

- 다수의 지자체에서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을 기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관계기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서 대책마련을 하고 있는 중

○ 사업내용

- 관련 법 조항과 정책 검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활성화 계획〉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사회적일자리창출지원사업〉 (노동부)
- 담당부처 부서 책임자, 관계자와 정책과 실무 협의
 - 정책 실행 협의(환경부담당자, 노동부담당자, 위원회담당자)
 - 실행계획안과 지원지침 확정
- 거점 공간과 작가 선정
 - 〈예술인 창작 거점 공간 제안 공모전〉을 통해 예비 거점 공간 배수 선정
 - 〈사례워크숍〉을 통해 거점 공간 운영 담당자의 추진 의지 확인(지자체 담당자, 재활용센터운영자)
 - 〈사례워크숍〉 후 시범사업 거점 공간과 참여 작가群 최종 선정
 - 작가의 기본적 구성은 목공예, 금속공예, 직조공예 등 분야 전문가, 전체5인 내외.
 - 선정된 참여 작가群은 거점 공간 리모델링 및 운영 실행계획 마련(현황조사, 수요조사, 시설디자인계획, 프로그램운영계획 등)
- 거점공간 리모델링
 - 리모델링 시설공사
- 거점공간 개소 운영

가. 작가지원

- 스튜디오 지원
- 상주 활동비(교육비, 창작지원비) 지원
- 교류프로그램 지원
- 작품발표를 위한 쇼케이스 지원 등

나. 프로그램

- 작가와 함께 하는 재활용 워크숍
- 나도 작가 DIY 장터
- 재활용 작품 쇼케이스 운영
- 온라인 재활용 커뮤니티 카페 운영
- 리사이클링 소식지 발간
- 지역통화로 운영
- 재활용작품전시회, 축제 등 이벤트 실시 등
- 운영사례관리(연구, 프로그램개발, 홍보 등) 및 평가(실적, 만족도 등)
- 평가환류
 - 모델 개선 및 보완

○ 예산

- 예산운영
 - 환경부로부터 예산 일부 지원, 지자체로부터는 관련 시설 무상 임대
 - 위원회 자체 예산 일부 편성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
 - 그 외 수익자 부담 원칙
- 예산(3개년)

〈표3-2〉 예술인 도시 활력화 사업 예산-재활용센터

항목	내용	비고
운영비	거점센터 리모델링 연간 1개 소당 3억 원*3개*3년=27억 원	환경부, 지자체 공간 무상임대
인건비	스텝 2천만 원*2인=4천만 원	노동부 운영수입
창작 활동비	작가 2천만 원*5인=1억 원	

○ 기대효과

- 예술의 공공적 역할 제고
- 예술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약 1,500명
- 생활에 밀접한 예술 정책을 실현하는 위원회 위상 확보

〈그림3-4〉 반쪽이 공방 재활용소품 워크숍



〈그림3-5〉DESIGN Trashy Furniture,

<http://online.wsj.com/public/article/SB119161270620850422.html>



2) 거리와 시장 거점 사업

“이 거리와 시장은 우리의 전용극장입니다”

○ 사업명 : 예술의 거리시장 프로젝트

○ 배경

-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통해 문명의 발전과 함께 제도화 되면서 삶의 현장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예술의 원형성과 공공성을 되짚어 현재적 가치를 복원함.
- 시장과 거리는 자본화된 대규모 쇼핑센터의 등장과 급속한 도시개발로 전통적으로 서민가계를 지탱하는 경제적 장과 문화적 소통의 장, 그리고 일상성과 비일상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축제의 장으로서의 역할이 약해지고 있음 .
- 현재 활동 중인 거리예술가들의 경우, 창작공간의 원형성에 대한 성찰과 현장감이 분명한 거리창작활동에 대한 만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생계의 이유로 지속적인 창작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목적

- 거리와 시장이(상가형, 골목형, 유목형) 가진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예술적으로 재해석하면서 축제의 장으로서의 문화공간화
- 예술에 의한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거리문화 활성화
- 예술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과 전용 발표 공간 확대

○ 관련현황

- 관련 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관광부 관할)에 의한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조항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한시법:2016.12.31〉(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관할)
- 상가형 재래시장
 - ‘재래시장법’에 따라 상가형 재래시장의 지원이 중소기업청 산하 ‘재래시장지원센터’를 주무부서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매출증대와 빈점포의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중기청 재래시장정책성과 보고회, 2007년6월27일)
- 유목형 재래시장
 - 유목형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제14조 ‘임시시장’에 해당하지만, 지자체의 정책의지와 시장운영자들의 필요성 결여로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함. 오히려 엄밀한 의미에서 무허가 노점상으로 간주, 일부 지자체(울산)에서는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일부 유목시장은 쓰레기처리나 교통혼잡 문제로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함.
 - 도시유목시장(요일장)은 대부분 광역권역 내에서 순회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대규모 신도시 아파트단지와 대도시 아파트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기 때문에 멀리 있는 재래시장과의 경쟁보다는 근처 대형쇼핑센터와 경쟁을 하는 편
 - 대형마트가 본격화되고 재래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한 1996년에 시작하여, IMF환란 이후 생계형 영세상인의 대거 유입으로 본격화됨. 최근 전국단위 기업형으로 발전한 일부 상인이 생겨났으며, 2~30대 자본이 없는 젊은이들의 참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
 - 이용자 대부분은 아파트 주민들로서 접근의 용이성, 가격경쟁력, 그리고 재래시장에 대한 향수 때문에 이용하고 있다고 함.
- 거리예술
 - 협의로는 ‘거리’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행해지는 예술을 지칭하지만, 광의로는 제도화된 극장이나 전시장 밖에서 전시되고 행해지는 비제도적 공간 활용 예술 일반을 의미하며, 제도화되고 고급화된 부르주아 예술에 대한

저항정신으로서의 예술을 일컫기도 함.

- 한국에서의 거리예술은 지자체 단위의 거리예술축제 행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축제의 특성상 한시적 운영(과천한마당축제, 안산거리극축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에 그치기 때문에, 작품 발표 공간으로서의 지속성과 일상성이 없으므로 장기적 창작수단이 되지 못 함.
- 주말을 이용한 거리문화공간으로서의 홍대예술시장(프리마켓, 희망시장)이 운영 중이지만, 상거래 주 종목은 생활소품이며, 공연은 콘서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음.
- 2006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의 <서울거리아티스트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자원활동독려’와 ‘평가를 통한 활동일부지원’에 그치고 있는 편.

- 프랑스 거리문화 정책

- 1980년대부터 국가정책으로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기획 추진
- 1990년대 초반부터 7개의 거리극 전용 창작 스튜디오 조성
- 2000년도에 29%의 국민이 그 해에 거리 공연(축제)을 참관
- 2000년도, 거리극단의 총 수입이 5천2백5십만 유로, 상근직원 3800명, 집계된 800개의 극단에서 연간2000 번의 공연
-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2001년에도 60개의 거리공연팀과 240만 유로의 지원 프로젝트 계약
- 2004년 650만 유로 투입
- 2005년 2월 2일,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거리 예술의 시대(Le Temps des arts de la rue, <http://www.tempsrue.org>)가 개막. 문화부장관 르노 돈 디유 드 바브르는 <거리 예술을 위한 지속적 정책 지원> 피력.

○ 사업내용

- 관련 법 조항과 정책 검토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지식경제부)
- 『문화예술진흥법』 (문화관광부)
- 〈서울거리아티스트〉 (서울문화재단)
- 〈사회적일자리창출지원사업〉 (노동부)
- 프랑스거리문화정책

- 담당부처 부서 책임자, 관계자와 정책과 실무 협의

- 정책 실행 협의(지식경제부(재래시장지원센터), 문화부, 노동부, 위원회 담당자 등)
- 실행계획안과 지원지침 확정

- 거점 공간과 창작자 선정

- 〈예술인 창작 거점 공간 제안 공모전〉을 통해 예비 거점 공간 배수 선정
- 〈사레워크숍〉을 통해 거점 공간 운영 담당자, 지역주민의 추진 의지 확인(지자체 담당자, 상인연합회 대표, 지역주민대표 등)
- 〈사레워크숍〉 후 시범사업 거점 공간과 참여 창작팀 최종 선정
- 창작팀은 기획자, PA시스템운영자를 포함한 7인 이상의 팀
- 선정된 참여 작가群은 거점 공간을 활용한 작품발표계획 마련(현황조사, 수요조사, 시설·디자인계획, 홍보계획, 공연 및 발표계획 등)

- 사업운영

- 홍보
- 시설확보 및 개선
- 공연 발표
- 연합 거리 축제

· 기업스폰서 연결

- 운영사례관리(연구, 프로그램개발 등) 및 평가(실적, 만족도 등)

- 평가환류

· 모델 개선 및 보완

○ 예산

- 예산운영

· 문화관광부와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으로부터 예산 일부 지원, 지자체, 지역주민회 또는 시장상인연합회로부터는 관련 사이트 확보

· 위원회 자체 예산 일부 편성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

· 그 외 예산은 기업스폰서 펀드레이징으로 확보(다년간 스폰서 계약 방식)

- 예산(3개년)

〈표3-3〉 예술인 도시 활력화 사업 예산-거리/시장 거점사업

항목	내용	비고
운영비	이동형 공연 발표 공간 마련, 홍보 등 연간 1개 소당 1억 원*3개*3년=9억 원	환경부, 지자체 공간 무상임대
창작 활동비	연간 3억 원*2개팀/1개소*3개소*3년=54억 원	노동부, 지자체, 주민회, 상가회, 기업 스폰서 연결

○ 기대효과

- 예술의 공공적 역할 제고
- 예술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생활에 밀접한 예술 정책을 실현하는 위원회 위상 확보

〈그림3-6〉 〈Close-Act Street theatre, <http://www.closeact.nl>〉



3) 도시 마을 거점 사업

“지속가능한 소통의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든다”

- 사업명 : 예술가와 오래토록 함께 할 세상에 단 하나, 우리 마을 창작 박람회
- 배경
 - 관광, 판촉 등 정부, 지자체 주도의 대규모 전시성 축제가 아니라, 기업 주도의 이벤트나 기획사가 주도하는 소비성 예술행사가 아니라, 커뮤니티로서의 마을의 기능 확대를 위해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작은 마을 행사의 필요.
 - 도시 마을(아파트형, 주택가형)의 경우, 급속한 개발과 인구이동으로 전통적인 지역 커뮤니티는 해체되고, 이웃 간의 왕래와 소통 또한 없어짐. 그리고 도시의 경쟁적인 학습 문화와 직장 생활, 그리고 선정적인 미디어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 간의 따뜻한 소통을 하는 데 서툰 상황.
 - 실용정부 들어 정책적 추진의지가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 시행착오에도 가능성과 성과사례를 보여주었던 참여정부의 지역 정책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예술인 참여’ 와 ‘커뮤니티성’, ‘지속성’ 을 확대하면서 ‘발전적 지속적 마을 만들기’ 의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점.
- 목적
 - 치유, 재생, 소통을 컨셉으로 하는 문화 예술적 지역 커뮤니티 구축
 - 예술을 통해 마을의 문화적 기능 재생
 - 소규모 마을의 정례적인 예술행사 개발 정착을 통해 지역 내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 확대 및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 예술인을 위한 지속가능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관련법령 및 현황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18조3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행정안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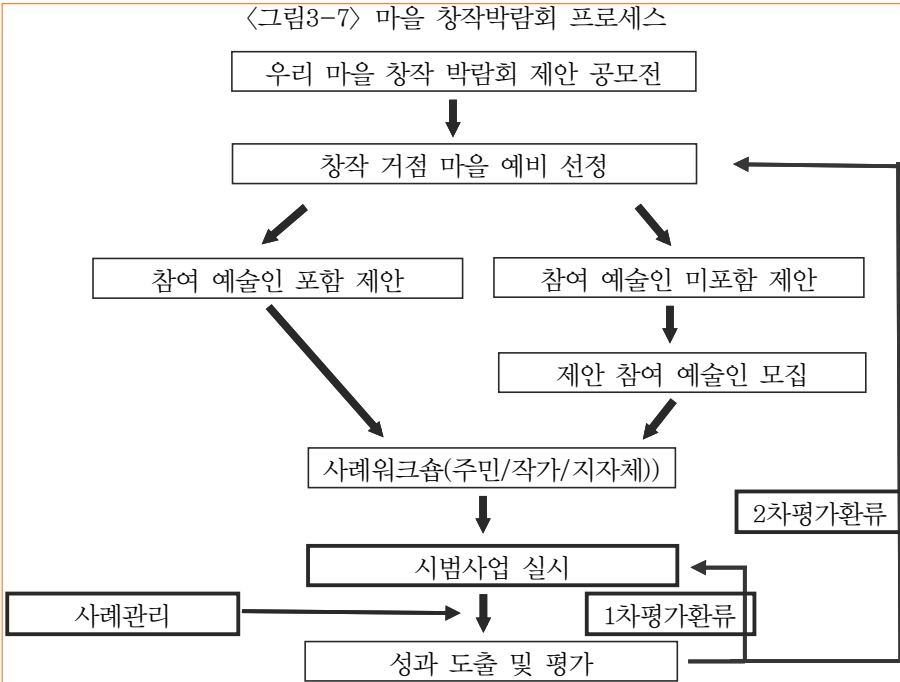
관할) 시행 중

- 위법에 근거하여 참여정부에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종합 지원 정책(2006년 8월, 행정자치부)을 통해 농림부, 행자부, 문광부 등 정부 각 부처별로 주민주도 어메니티(Amenity, 쾌적성) 향상을 골자로 마을 커뮤니티성과 문화 특성과 제고 목적의 사업들이 2007년 시범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실용정부 들어선 2008년에는 국토해양부 주도의 추진사업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외에는 대부분 축소되거나 아예 시행조차 되지 않고 있는 편.
-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 중 아파트·소규모단지·자연부락 대상, 주민참여, 민관협력, 주민주도, 예술가 협력 등 본 사업과 유사한 대상범위와 운영원칙으로 2007년 시범 추진되고, 현재 지자체로 이관된 행정안전부의 사업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의 경우에도 ‘소규모 쉼터, 마을 꽃밭, 담장 벽화장식, 마을 공원 가꾸기’ 등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조직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디자인 영역의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로서의 마을 기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사업내용

- 관련 법 조항과 정책 검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계획> (행정안전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기획팀)
 -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국토해양부 도시정책팀(www.citv.go.kr)
 - 그 외 각 부처별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관련 계획(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보건복지 가족부 등)
 - <사회적일자리창출지원사업> (노동부)
- 담당부처 부서 책임자, 관계자와 정책과 실무 협의
 - 정책 실행을 위한 정보교환과 협의(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노동부, 위원회 담당자)
 - 실행계획안과 지원지침 확정
- 거점 공간과 참여 작가 선정

〈그림3-7〉 마을 창작박람회 프로세스



- 〈우리 마을 창작 박람회 제안 공모전〉을 통해 후보 마을 배수 선정
- 〈사례워크숍〉을 통해 거점 마을 주민과 예술인, 자치단체 담당자의 추진 의지 및 파트너십 확인
- 〈사례워크숍〉 후 시범사업 거점 마을과 참여 작가群 최종 선정(작가는 기획 담당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5인 이내로 구성)
- 선정된 참여 작가와 마을 주민들이 함께 거점 마을의 지속적인 문화 예술적 커뮤니티 구축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마련(현황조사, 수요조사, 시설·디자인계획, 프로그램운영계획 등)

－ 사업운영

- 사업운영 장소 확보 및 개선

- 프로그램 운영(창작 워크숍, 마을 아트 페어, 마을 예술제 등)
- 홍보
- 우리마을창작박람회 홈페이지 개설(참가신청접수, 워크숍 안내 등)
- 운영사례관리(연구, 프로그램개발, 홍보 등) 및 평가(실적, 만족도 등)
- 평가환류
 - 모델 개선 및 보완

○ 예산

- 예산운영
 - 국토해양부 등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편성된 정부 부처의 사업과 연계, 지자체로부터 예산 일부와 관련 공간 협조
 - 위원회 자체 예산 일부 편성
 -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
 - 그 외 수익자 부담 원칙
- 예산(3개년)

〈표3-4〉 예술인 도시 활력화 사업 예산 - 마을 창작 박람회

항목	내용	비고
운영비	거점 마을 사업 운영 공간 마련, 홍보 등 연간 1개 소당 1억 원*3개*3년=9억 원	정부관련부처, 지자체 공간 무상임대
창작 워크숍비	연간 1개 소당 1억 원*3개*3년=9억 원	방과 후, 주말학교형
창작 활동비	연간 1개 소당 1억 원*3개*3년=9억 원	노동부 운영수입

○ 기대효과

- 예술의 공공적 역할 제고
- 예술가를 위한 지속가능한 창조적 일자리 창출 : 약 1,000명
- 생활에 밀접한 예술 정책을 실현하는 위원회 위상 확보

제4절 . 예술인 해외파견 사업

1. 목적

- 해외 도시, 지역, 마을의 지역의 문화 기관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나 공동 창작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술가의 창작 욕구 활성화→교류
- 문명의 발생지, 역사적인 문화 원형의 보존지에 대한 예술적 방법을 통한 기록, 연구를 통해서 창작 원천에 대한 개발→다큐멘터 및 연구
- 예술가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적 자원/원형에 대해 이해/습득함으로써 지역(해외)과 지역(국내)을 연결하는 문화적 교류의 방식 개발→봉사
- 창조성의 원천을 유목과 정주의 혼합을 통한 개발하는 방식으로 창조적이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의 새로운 모델 개발

2. 기대효과

- KOICA같은 해외 봉사활동 유형에 예술적 활동 포함. 예술이 존재하는 맥락, 지역과 예술 활동을 결합함으로써 많은 예술 인적 자원의 계발
- 동시대의 창의적 원천인 문명적 원형, 자치 모델, 예술의 역할, 지역 예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 개발
- 세계적인 해외 파견 사업을 통해서 창조적이고 사회적인 다양한 해외의 예술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 해외 파견후 돌아온 예술가들이 한국의 소도시/농촌 지역[귀환지]과 [파견지] 지역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통해서 보다 심층적인 문화 교류의 토대 마련. *Local Network Artist* 개념 정립

3. 현황분석

- 해외 문화원 중심의 국제 교류와는 다른 새로운 모델 창출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교류사업은 공연/전시 중심으로 실질 교류를 만들고 있지 못함. 전문적인 예술가를 통한 내용적인 교류 필요.
- 해외 미술관, 레지던스 하우스 프로그램 등의 사업성고가 개인 예술가로 귀결되고 있어 사회적인 효과에 대한 호응을 받고 있지 못함.

국내 사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한-뉴질랜드 미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한국 국제교류재단이 2007년부터 추진하는 한국과 뉴질랜드 미술관의 상호 레지던스 프로그램

- 호주의 경우 Asia Link 사업을 통해서 1990년 이후 매년 30명 이상의 호주 예술가와 기획자를 해외 파견(4달). 300명의 예술가를 아시아 지역으로 보내서 예술 교류의 성과를 축적하고 있음

<p>해외 사례</p>	<p style="text-align: center;"><호주의 Asia Link></p> <p>호주 멜버른 대학교에서 문화예술기금을 받아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International Collaboration, 공연예술의 공동워크숍, 시각예술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원하는 작가를 사전에 모아서, 해외에서 조건이 맞을 경우 일부 지원(초청국가가 있을 경우 예산을 모아서 지원) 파견</p> <p>우리나라의 경우 기획, 문학, 공연, 미술 분야에서 35명 이상의 호주 예술가, 기획자들이 다녀갔다. 주요 초청기관으로는 국민대학교와 쌈지스페이스(미술), 예술의전당,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및 무용원(공연), 하자 센터, 국제공연예술제 등이다. 2007년도에는 Visual Art 12, Art management(Curator, Festival Director..etc) 12, Performing Art 10, Literature 8명 등 파견</p>
-------------------------	---

○ 스톤&워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창문아트센터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은 지역문화에 기반한 레지던스 교류의 가능성을 보여줌

4. 사업 개요

○ 참여자격

해외 파견 후 국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작가/기획자

○ 사업단계

- 2009년 : 시범사업으로 모델별로 10여개 지역 20여명의 예술가파견
- 2010~2011 : 유형화하여 매년 30개 지역에 60여명의 예술가 파견
- 2012~ : 매년 60여 지역에 120여명의 예술가 파견

○ 사업 내용

- 1) 작가 공모
- 2) 지역 선정(기관, 단체, 지자체)
- 3) 사전 워크숍
- 4) 결과 제출
- 5) 귀국 후 프로그램

○ 사업 유형

- 해외 문화예술 봉사형(예술교육형)
- 해외 문화 연구형(창작원천)
- 해외 예술 교류형(공동워크숍)

5. 추진방식 및 절차

1) 예술인 공모

- 작가 공모 후 선정
- 각 예술 영역(기획, 큐레이팅, 창작워크숍, 다큐멘터...등)별로 작가 공모후 선정
- 지역과 수도권을 6 : 4 비율로 구성

2) 지역 선정 방식

- 세계 지역별로 네트워크 구축
유럽권/북미(이탈리아 볼로냐~스위스의 책마을까지)
호주-남미 네트워크(축제와 지역, 공연과 지역)
- 아시아 예술 네트워크(말레이시아의 사라와크 등 마을/원시림..과 연결된 곳)
- 이슬람권 예술 네트워크(이슬람 문화의 창조적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곳)
- 예술가들의 그룹 네트워크(일본의 오크빌, 필리핀의 PETA...)
-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조사
- 문화 예술 봉사형 / 교류형 / 창작활성화형

3) 사전워크숍

- 파견 국가의 언어 프로그램
- 파견 국가의 문화적 프로그램 및 예술 지형에 대한 이해
- 기록 방식 및 활동 방식에 대한 이해

4) 해외 문화예술 활동

- 파견 기간은 3개월, 6개월 정도로 다양화
- 보고자로서 예술가 모델 : 파견 지역 사회의 문화적 원천에 대한 통찰. 예술적 형식에 대한 조사. 사진/스케치 다큐멘터
- 교류자로서 예술가 모델 : 파견 지역의 예술가(건축, 디자인, 공연, 시각...)들과 교류를 통해서 예술적 교류 실행. 파견 지역에 예술관련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 참가.

- 교육자로서 예술가 모델 : 파견 지역의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실행

5) 귀환 후 프로그램(파견 다음 해에 실행)

- 사업의 취지 상 파견된 예술가는 귀국 후 〈지역 예술〉 활동을 전제
- 예술 창작~공공예술 프로젝트까지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철학, 인식, 지평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결핍된 것을 파견된 지역의 풍부한 문화 양식과 모델로 보충
- 파견지역-귀환 지역을 잇는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면서 지속적인 교류 사업 기획
 - 농업 기술, 에너지전환 기술 등등 문화-과학-기술의 통섭 부분
 - 지역 문화예술의 존재 모델을 통해서 예술과 지역문화의 결합
- 지역 프로젝트 계획안 제출(1~2년 기준)
 - 국내 지역과 협의 후 확정
 - 파견 국가와의 교류 프로그램 포함

6. 유형별 구분

1) 해외 문화예술 봉사형

-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남미 지역등 다양한 지역에서 문화 예술적 봉사에 기반을 두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실질적 습득
- 예를 들어 페루의 잉카문명이 있는 마을에서 문화 예술적 봉사를 실행하면서, 잉카 문명에 대한 채록 및 다큐멘터를 병행. 잉카문명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능성을 작가의 창작과 결합

2) 해외 문화 연구형

- 인도, 이슬람 등 역사적으로 깊은 문화적 층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에 대한 예술적 리서치 방법으로 연구
- 예를 들어 이슬람의 시장문화, 정치문화에 대한 사진 기록, 공연예술가의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을 통해서 미래 예술을 담을 수 있는 문화 원형 연구

3) 해외 문화 교류형

- 인도, 일본, 중국의 기관 레지던스나 창작워크숍에 참여하여 기존의 문화적 교류와는 다른 새로운 교류 방식 개발
- 예를 들어 인도의 미디어아트 레지던스나 터키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

7. 예산

- 파견예술인에게는 체재비 및 활동비 지원
- 귀국 후 프로그램은 보고서를 받은 후 최종 프로그램 선정
- 사전워크숍 프로그램 4억
- 예술가 체재비 및 활동비 2000만(6개월 기준)
- 귀국 후 프로젝트비 5000만(6개월 기준)

〈표3-5〉 예술인 해외 파견 사업 예산

년도	예산 산출	합계	연인원
2009년	-예술가 범퍼프로그램 4억 -예술가 체류비 및 활동비 $2000\text{만} \times 20\text{명} = 4\text{억}$ -프로젝트비 5000만 $\times 10\text{명} = 5\text{억}$	매년 13억	20명
2010~2011	-예술가 범퍼프로그램 및 지역 매칭 8억 -예술가 체류비 및 활동비 $2000\text{만} \times 60\text{명} = 12\text{억}$ -프로젝트비 5000만 $\times 30\text{명} = 15\text{억}$	매년 35억	60명
2014~2010	-예술가 범퍼프로그램 및 지역 매칭 12억 -예술가 체류비 및 활동비 $2000\text{만} \times 150\text{명} = 30\text{억}$ -프로젝트비 5000만 $\times 100\text{명} = 25\text{억}$	매년 67억	120명



제4장

결론

지금까지 예술인의 사회적 현황과 각종 예술인 관련 공공사업 등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인 예술인의 창작을 활성화하고, 예술의 인적자원이 중심이 되어 도시 공간과 농촌 지역을 변화 시킬 사업모델을 설계 하였다.

이 사업의 실행을 위한 전략으로는

첫째, 제시된 단위사업과 세부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 기획을 실행할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본 사업실행 추진단과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책임감 있고 유연한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선발될 예술인들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과 예술인들의 유형별 분석,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기존의 배분 지원이 아닌 예술가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기획이므로, 본격적인 사업 실행 이전 시범사업의 운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완전한 모델 구현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시스템 구축과 구동을 위한 노력 외에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술가들 각각의 의지와 예술계 내부의 자성이다. 기존의 지원정책들은 예술가의 창작결과물에만 치중하고 동기와 과정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평가하지 않았다. 이는 예술가에게는 나태함과 오만함을 그리고 예술지원 기구는 스스로 공정함을 잃고, 시스템의 진화를 고민하지 않아 점차적으로 대중과 괴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지금까지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개발은 핵심과 인본이 결여되고 그리고 문화와 예술이 부재한 상태로 이루어져왔다. 이런 결과들은 현재 개발지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일선 실무자들은 해결방안으로 새로운 정책과 사업을 기대하고 있다.

본 사업의 특성이고 사업 목적인 핵심인 “예술인을 중심으로” 한 ‘예술인 참여를 통한 도농 활성화 방안’ 은 기존 결여와 부재의 각 개발 사업을 변모시키고, 또 다른 거대한 창작을 이룩할 것이다.

그리고 예술이 미래 대한민국에서 삶의 근원으로서 자리 매김 하는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할 사업이 되리라 확신한다.

제5장

참고자료

■ 참고 자료

〈 예술인 농촌정착사업 관련자료 〉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제4조~제14조)

(1)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절차 (제4조~제10조)

◆ 국가균형발전계획 등의 세부 수립절차를 규정

- **위원회**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목표, 추진 전략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안」을 작성
- **산자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기초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
- **산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별균형발전계획(안)”, “부문별시행계획” 등의 **수립지침**을 작성
 - 산자부장관은 “시행계획수립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당해 연도 시행계획·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위원회에 제출

(2) 시행계획의 평가 (제12~제14조)

◆ 시행계획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과 평가 제도를 연계

- 위원회는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
- 산자부장관은 종합평가보고서를 반영하여 평가 실시
 - 산자부장관은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매년 4.30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
- 예산처장관은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특별회계를 편성

2. 국가균형발전시책 (제2조~제3조, 제15조~제20조)

(1) 낙후지역 지정 (제2조)

-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변화율, 재정상황, 소득수준 등의 지표를 종합평가하여 행자부장관이 낙후지역을 지정

(2) 공공기관기업대학의 지방이전 (제15조 ~ 제17조)

- 중앙행정기관 등과 수도권입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경우는 이전대상공공기관에서 제외
- 산자부장관은 인구밀도, 광업·제조업출하액, 사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방이전 지원 대상지역” 을 선정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절차 등을 규정함

(3) 수도권관리의 기본방향 등 (제18조)

- 건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위원장과 협의하여 “수도권의 기본방향” 을 작성

(4) 지역발전투자협약 (제19조)

- 산자부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 공동으로 사·도지사와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 산자부장관은 협약안 제출 등 체결절차와 관련하여 사도와 관계부처의 창구역할 수행
- 투자액 등 투자계획은 예산처장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반영

3. 국가균형발전 추진체계 (제21조 ~ 제33조)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제21조 ~ 제29조)

- 현행 「국가균형발전위원회운영규정」을 보완하여 당연직위원의 확대, 자문위원단의 구성을 추가로 규정

(2) 지역혁신협의회 (제32조, 제33조)

- 사·도협의회는 60인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
 - 시·군구협의회는 30인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34조 ~ 제48조)

- 지역의 특성과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
- 지역별 낙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예산집행과정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확대
 - 특별회계 사업의 전용범위를 확대하고 명시·사고이월 이외의 경우 단위사업비 총액의 20/100이내에서는 자율적인 이월이 가능

〈시행계획 수립·평가 및 특별회계 편성 절차(안)〉

추진일정	추진절차
전년도 11.30 (산자부)	지자체 및 부처에 시행계획수립지침 통보
↓	
당해 연도 2.15 (지자체·부처)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당해 연도 시행계획 제출
↓	
3~4월 (균형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평가(사후평가)
↓	
4.30 (산자부)	평가결과 통보
4.30 (지자체)	각 부처 및 균형위에 예산신청서 제출
↓	
5~6월 (균형위)	지자체의 예산사업 평가(사전평가)
5.31 (각부처)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서 제출
↓	
6.30 (균형위)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예산처 등에 통보
↓	
7월~9월 (예산처)	균형위 의견을 토대로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국회제출
↓	
11.30 (산자부)	시행계획수립지침 통보

5.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4.1일 시행

-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의 구체 골격 확정 -

- 산업자원부와 기획예산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안)이 3.23(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오는 4.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음
- 산업자원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수립, 특별회계 편성, 사업집행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관된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각 단계의 주요내용을 심의하여 관련부처, 지자체 협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
- 산자부는 전년도 11.30일까지 “계획수립지침”을, 중양부처 및 시·도는 매년 2.15일까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작성
- 기획예산처는 특별회계 예산안편성지침을 3월말에 발표하고, 시·도 및 중양부처는 이에 근거하여 5월말까지 기획예산처에 다음년도 예산을 요구
- 균형위는 실적평가 및 익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매년 6월 말까지 작성하고 기획예산처는 균형위 및 부처의견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
- 둘째, 성과지향적인 지역사업집행을 위하여 성과목표, 관련기관의 역할·서비스 분담, 투자재원 등으로 구성되는 최초의 종합적인 지역협약제도로서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를 운용
- 특별회계 예산편성이후에 산자부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16개 시·도와 협약을 체결하며,

- 동 협약제도를 통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합의를 통한 성과지표 마련, 집행계획 수립 및 상호역할 분담이 가능함으로써 지역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 셋째, 사·도별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인 지역발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의 산·학·연 전문가가 중심이 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필요시 기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음
- 넷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으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
- 지역개발사업계정에는 낙후지역·농산어촌 개발 및 지역 SOC개발사업 등이 포함되며 지역혁신사업계정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 등이 포함
- 특별회계 사업은 사·도가 자율적으로 정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신청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예산편성
- 또한 예산집행과정에서 이월 및 전용범위 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

○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원계획 (행정안전부)

1.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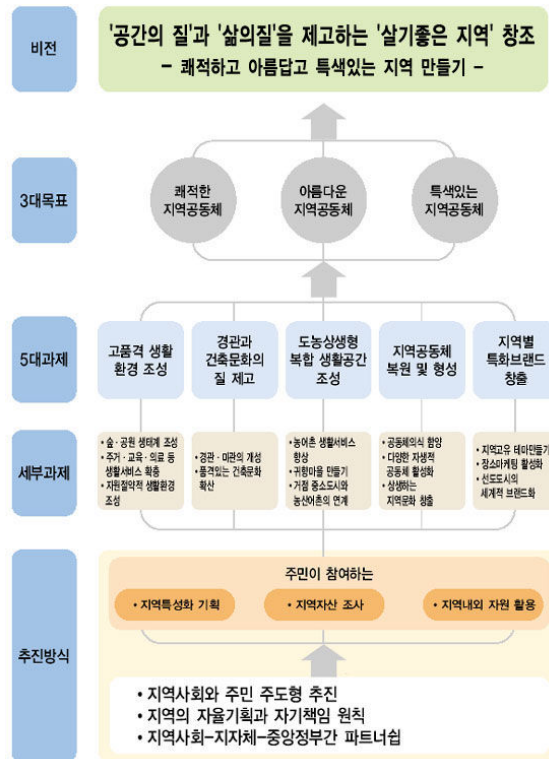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와 농어촌은 물질주의적 양적팽창과 환경 파괴적 개발로 인해 다량의 문제군(群) 발생
 - 도시로의 급격한 인구집중과 함께 획일적 생활환경과 척박한 문화여건, 생태환경 파괴 등 도시문제가 심화
 - 농어촌은 인구유출,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지역사회의 유지 자체가 곤란한 실정
- 도시와 농어촌의 삶의 질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균형발전 개념의 확대’와 체계화가 필요
 -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도시와 농촌의 상생, 개발과 환경의 조화, 성장과 복지의 병행, 세계화와 지방화의 융합이 중요
- 향후 국민소득 2~3만불 시대와 지식·창조형사회로 이행하면서 ‘삶의 질’을 우선하는 가치관·행동·정책패러다임으로의 대전환이 요구됨
 -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에는 우수한 인재와 세계적 기업이 몰려 고부가가치형 창의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결과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게 됨

※ 1998년 미국 클린턴 정부의 ‘살기 좋은 커뮤니티 정책’의 주된

메시지 : Livable Community = Economically Powerful Community

- 삶의 질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은 정부주도에서 탈피하여 지역의 주체인 동시에 정책수혜자인 주민들이 사업기획과 집행의 전 단계에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
-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도시와 농촌을 품격 높은 삶의 질을 갖춘 살고 싶은 지역사회 재창조

2. 비전과 실천과제



3. 5대과제 사례예시

(1) 고품격 생활환경 조성

- 숲과 공원으로 둘러싸인 녹색도시 만들기
 - 녹지충량제 도입 등 녹지
 - 공원 확충하기
 - 학교숲 만들기, 담장허물기와 한평공원 갖기
 - 녹색길(Greenways) 만들기
 - 테마형 도시생태하천 만들기
- 사람중심의 녹색교통도시 만들기
 -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 보행자 친화적 가로 조성하기
- 수준 높은 교육·의료·복지 등 생활서비스 제공
 -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학교 만들기
 - 주민수요 맞춤형 의료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 재해·범죄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

(2) 경관과 건축문화의 질제고

- 아름답고 개성 있는 도시경관·미관 가꾸기
 - 가로시설물 정비로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
 - 가로, 교량, 문화재 등 주요 시설물 조명 연출
 - 구릉지/하천변 자연경관 살리기
 -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 마크 만들기
- 품격 있는 건축문화 확산하기
 - 창조적 건축디자인 발굴·보급하기
 - 시민이 뽑은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

-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건축문화 교실
- 전통 역사거리 복원하기

□ 풍요로운 삶을 위한 문화여건 만들기

- 테마별 공연장·미술관·박물관 만들기
- 찾아가는 공연 활성화(복지시설 등)
- 생활권 도서관 늘리기
-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포럼 운용

(3) 도농 상생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 도시민을 위한 귀향마을 만들기

- 기호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거단지 만들기
- 기존마을과 융화되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 마을 숲 조성하기

□ 양질의 생활서비스 제공하기

- 농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 소도읍·면의 복지, 문화기능 강화
- 인근중소도시를 평생학습도시로 만들기
- 배후중소도시의 의료지원기능 강화

□ 귀향도시민의 여가 및 느린 생활 즐기기

-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 농어촌 봉사운동 참여
- 느린 생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친녹회, 동호회 등 지역 소모임 활성화

(4)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

□ 어울려 사는 커뮤니티 만들기

- 주민 참여형 마을 가꾸기 (꽃길 만들기 등)
- 마을행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통한 만남과 교류 활성화

□ 학교 · 의료 공동체 만들기

- 학교시설의 복합화 및 지역사회에 개방하기
- 방과 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기
- 주민들의 자발적 모임을 통한 환자방문과 간병하기
- 공공·민간 의료기관 협력을 통한 의료봉사 활성화

□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도시/마을 만들기

-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복지 확충하기
- 고령자와 장애인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계층혼합(Social Mix)으로 함께 사는 마을 만들기

(5) 지역별 특화브랜드 창출

□ 지역고유의 테마 만들기

- 마을이야기를 발굴하여 추억공간 만들기
- 우리 지역만의 독특한 상징 만들기
- 지역고유자산을 생태관광자원화
- 지역특산물을 브랜드로 키우기

□ 장소마케팅 전개하기

- 세계에서 하나뿐인 고유의 마을 축제 만들기
- 지역고유테마를 활용한 해외지역과 교류하기
- 재래시장만의 특별한 이벤트 만들기

□ 균형발전 선도도시를 살고 싶은 도시의 모델로 만들기

- 한국도시를 대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만들기
- 개성 있고 경쟁력 있는 혁신도시 만들기
- 투자를 촉진하는 살기 좋은 기업도시 만들기

4.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대상지역 (2007-2009)

□ 행자부는 2월 1일 (목) 전국의 도시와 농산어촌을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 있게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2007-2009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을 통하여 국가지정 시범지역 30개, 도지정 시범지역 17개를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음

□ 이번 시범지역을 선정한 경위는,

- 지난해 3월 28일 국정과제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비전과 과제 등 정책구상을 발표한 이래,
- 행자부에서 지난해 8월 8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추진계획을 확정하였고, 같은 해 10월 2일에 읍면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였음
- 공모계획을 바탕으로 총 140개 중 126개 시군이 2개월여 동안 주민과 행정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행자부에 계획서를 접수하여 90%가 넘는 참가율을 보였음
- 심사는 1월 1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실시되어, 최종 30개 국가지정 시범사업 대상 지역이 확정되었음

□ 이번 심사는 산·학·연·언·NGO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심사위원 (위원장 정용덕)으로 참여

- 심사는 1, 2차로 나누어서 이루어졌는데, 1차 심사는 가급적 심사기준을 계량화 하여 서면 심사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2차는 현지실사와 직접 발표를 들으면서 상호 질의응답을 통한 질적인 방식을 가미하였음

※ 심사기준 : ① 지역의 여건, ② 지역의 의지, ③ 목표의 적합성, ④ 계획의 충실성, ⑤ 예술성, ⑥ 지속가능성, ⑦ 실현가능성, ⑧ 기대효과 등

- 먼저, 1차 심사는 126개 시군을 인구 5만 이하 군, 5만 초과 군, 도농복합시로 구분하여 계획서의 내용을 가급적 계량적으로 심사하여 47개를 선정하였음

- 심사일시 및 장소 : 1. 11~12, 원주 오크밸리
- 심사위원 : 총 41명 (외부위원 31명, 내부위원 3명, 관계부처 공무원 7명)
- 2차 심사는 인구규모에 따른 경쟁에 더하여 시도간의 최소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시범지역을 도별로 1~7개를 선정한제로 설정하였음
- 현지실사 : 1. 17~20, 발표심사 : 1. 24~25, 프레스센터
- 심사위원 : 총 21명 (현지실사반 12명, 발표심사위원 9명)

□ 선정결과,

- 1차를 통과한 47개 지역 중 좀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은 30개 지역은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하고, 17개 지역은 도지정 시범지역으로 하여 차등지원하기로 하였음
- 이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개수를 살펴보면 시도별로 다소 격차를 보였음
 - 도 차원에서 행복마을과를 만들어 전 시군이 총력을 기울인 전라남도가 13개 (국가 7개, 도 6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였고, 심사위원들이 그 내용 측면에서 “타 시도에 비하여 몇발 앞서 있다” 라는 평가를 받았음
 - 전남에 이어서 경북이 8개 (국가 6개, 도 2개), 전북이 7개 (국가 3개, 도 4개), 강원이 6개 (국가 3개, 도 3개)로 강세를 보였음. 이들 지역들도 주민과 지역 사회에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좀 더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기 위해서 소속 시군들에게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음
 - 반면에 경기, 충북, 충남은 2개, 경남은 3개가 선정되는데 그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대한 개념정립과 노하우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시도간의 최소한의 균형은 유지하되, 열의와 역량 있는 시도에 좀 더 많은 선정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임

〈참고 2~4〉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대상지역 현황

구 분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5만 이하 군.	국가		화천, 영월, 철원	단양, 보은			곡성, 평해, 장흥, 강진, 진도	군위, 영덕, 고령	함양		14	
	시도		횡성, 양양			임실, 진안, 장수	구례, 장성					
5만 초과 군	국가	기장			금산	완주, 부안	완도, 무안	의성	남해		8	
	시도				서천, 예산	고창	해남, 보성, 담양					
도농복합 사	국가		양주, 안성		논산	남원		포항, 안동	밀양	제주	8	
	시도			강릉			광양	구미, 경주				
계	국가	1	2	3	2	2	3	7	6	3	1	30
	시도	—	0	3	0	2	4	6	2	—	—	17
	총계	1	2	6	2	4	7	13	8	3	1	47

〈표 1〉 2007-2009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국가 및 도지정 시범지역

○ 당초 제시한 살기 좋은 지역모델별로 47개 지역을 분류해보면, 생태형이 13개로 가장 많은 비율 (28%)을 보였고, 문화형 (10개), 산업형 (8개) 등의 순이었음

※ 생태형 (13), 문화형 (10개), 산업형 (8개), 관광형 (7개), 가족형 (3개), 교육형 · 건강형 (2개), 기타 평화형 (1개)

○ 이번에 선정된 47개 지역은 “의지와 여건” 을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에내에서 마을을 엄선하였고,

- 지자체별 대표 브랜드와 연계되는 마을들을 고품격의 생활환경으로 조성하고자 하였음

※ 안성시 안성맞춤 커뮤니티,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금산군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 남원시 춘향이 얼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 강진군 천년 비색 청자마을, 무안군 하늘백련 마을, 고령군 대가야 가얏고마을 등

- 또한, 이번 계획에는 지역과 관련된 참신하고 창발적인 아이디어가 다수 발견되었음

※ 양주시 천생연분 자전거마을, 곡성군 자연속의 섬진강 기차마을, 장흥군 인간·자연 공존 우산 슬로우 월드

- 47개 지역만들기 계획의 공통적인 특징은 단편적인 사업위주가 아닌 물적, 인적, 지역공동체, 운영체계 등 마을 전체를 재설계하였다는 것이고, 대상지역의 공간적 범위는 2~3개 마을이 다수를 차지하였음

□ 선정지역에 대한 향후 3년간 (’ 07~ ’ 09) 지원내용은

○ 국가지정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30개 지역에 대하여는

①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고,

■○○군 △△마을의 경우 : 원예촌 조성 및 예술축제 (문광부 1억원), 정보화 마을 (행자부, 3억원), 학교 잔디운동장 (교육부, 2억 5천만원), 봉수로 정비 (해수부, 4억원), 아름다운 화장실 (행자부, 1억 6천만원), 하수처리정비 (환경부, 1억원) 등

② 3년간 평균 20억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며,

■ ’ 07년 5억원, ’ 08년은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차등해서 지급하되 평균 10억원, ’ 09년도 같은 방식으로 평균 5억원

③ 또한,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살기좋은 지역특구』로 지정할 계획임

■ 살기 좋은 지역특구 지정시 공립학교 설립·운영 및 외국인의 교원 및 강사 임용이 가능해지고,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등에 있어서 특례를 적용받는 등 다양한 규제가 해소됨

○ 도지정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17개 지역에 대하여는

- ① 먼저, 해당지역으로부터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나 제도 등을 접수하여 행자부에서 원스톱으로 해소해주고,
- ② 도가 주관하여 균형회계, 일반회계내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한 중앙정부 정책을 묶어서 패키지로 지원하며,
- ③ 또한 3년간 도가 6억원 내외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급하고, 금년말에 행자부가 성과를 평가하여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추가 제공할 계획임

□ 향후 사업추진계획

- 행자부에서 선정지역에 대한 종합지원방안과 사업추진일정을 관계부처와 협의 거쳐 2월말까지 구체화하여 발표함
- 그리고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선정지역과 균형위·행자부 및 관계전문기관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개념설정, 민과 관의 신뢰도 향상방안, 민관협력모델 등을 주제로 집중적인 공동학습을 가짐
- 한편, 4월부터 5월간은 선정지역 단체장, 관계 공무원 및 마을리더 등을 대상으로 미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마을 만들기 사례를 견학함
- 지역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세부추진계획을 3월말까지 주민들과 함께 작성하고,
 - 금년 6월말까지 관계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인적, 물적, 운영시스템 등을 재설계함. 이와 같은 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시범지역의 경우에는 30개 지역별로 지원단을 두고, 마을 디자인분과, 지역공동체분과, 지역산업분과 등으로 세분하여 지역내외의 전문가로 팀을 꾸릴 계획임
 -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가 끝나면 7월부터 본격적인 지역만들기가 민관합

이 협력하여 시행됨. 금년 하반기에는 그동안 사라져간 지역공동체 복원을 위하여 가장 많은 노력이 기울여질 것임

- 내년에는 지역소득기반 창출 및 지역의 특화브랜드 조성이 이루어 질 것임. 또한 , 고품격의 생활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공간이 창조될 것임. 아울러, 중앙정부의 정책을 활용하여 교육과 의료 등의 여건을 집중 보완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도시민들이 돌아오는 지역을 만들어 나갈 것임
- 그리고 2009년도에는 2년간 달성하지 못한 지역만들기 세부사업들을 마무리 하게 될 것임

□ 재원과 기대효과

- 국가지정 시범지역 30개에는 국비 20억원과 시군비 평균 30억원이 투입되고 , 지역별 실정에 맞는 민간투자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가 지원됨
- 중앙정부 정책패키지는 2월 중에 기획예산처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임
- 행자부에서는 국가 및 도지정 47개 지역의 성공이 우리나라 생활거주 지역의 큰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그동안 떠나는 것으로만 인식되던 농산어촌 지역이 이제는 교육과 의료 그리고 고품격의 생활환경이 조성되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 될 것이고, 47개 지역에 도시민들의 이주물결이 일 것으로 예측됨
- 그리고 이와 같은 47개의 성공사례는 지역만들기의 성공거점이 되어 타 지역으로부터 배우자는 열풍이 일 것이고, 이는 우리나라 도시와 농산어촌 생활공간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게 될 것임
- 한편, 그동안 다수 부처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분산투자하던 방식이 전면 혁신되어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한 효율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지고
- 행자부의 성공모델이 건교·농림부 등의 타 부처의 사업에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지역

사도	사군	마 을	주 모델
부 산	기장군	예술과 소득의 농촌체험마을	문화형
경 기	안성시	안성마춤 Community Art Town	문화형
	양주시	천생연분 자전거 마을	관광형
강 원	영월군	사랑과 정의 스위트 홈 마을	가족형
	철원군	남대천 쉬리마을	기타형
	화천군	생태형 지역만들기	생태형
충 북	보은군	속리산속 생태관광체험마을	생태형
	단양군	에듀토피아 단양 글로벌 빌리지	교육형
충 남	논산시	햇빛촌 바람산 마을	가족형
	금산군	수통고을 적벽강 생명마을	생태형
전 북	남원시	춘향이 열이 담긴 건강한 구름다리 마을	건강형
	완주군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 마을	문화형
	부안군	은빛갈대 서빈노을 자전거마을	생태형
전 남	곡성군	자연속의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형
	장흥군	인간자연 공존 우산 Slow World	가족형
	강진군	천년 비색 청자마을	문화형
	무안군	하늘 백련마을 조성	산업형
	함평군	나비연꽃마을	생태형
	완도군	살기좋은 울모래 마을	관광형
	진도군	시서화의 고장 윤림예술촌	전통형
경 북	포항시	다우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생태형
	안동시	안동 산악(마)마을	산업형
	군위군	행복 한밤마을	생태형
	의성군	산수유 마을 꽃길 20리	생태형
	영덕군	축산아트 프로방스	관광형
	고령군	대가야 가얏고 마을	문화형
경 남	밀양시	공연예술 메카 밀양만들기	문화형
	남해군	보물섬 남해 참좋은 물건만들기	관광형
	함양군	세대와 문화 이어가는 전통마을	전통형
제 주	제주시	자연과 문화예술의 에코빌리지	생태형

〈참고 3〉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도지정 시범지역

사도	사군	마 을	주 모델
강 원	강릉시	살기 좋은 해살이 마을	관광형
	횡성군	수해를 넘어 태어나는 마을	문화형
	양양군	누구나 가고픈 송천 자송마을	문화형
충 남	서천군	도시와 농촌의 갈숲마을	산업형
	예산군	한국 의좋은 마을	문화형
전 북	진안군	안천 에듀-휴파크 마을	교육형
	장수군	장수무병마을 양약가꾸기	건강형
	임실군	한국의 스위스 아펜젤 치즈마을	산업형
	고창군	흥덕 복분자 타운	산업형
전 남	광양시	웰빙 리버사이드 빌리지	생태형
	담양군	역사의 훈이 숨 쉬는 전통음식고을	산업형
	구례군	지리산 산수유 마을	산업형
	보성군	녹차향이 감도는 다향마을	생태형
	해남군	세계로 향하는 땅끝마을	관광형
	장성군	ASSA 휴마을 그린 포리스트	생태형
경 북	경주시	함박산(천연염색) 꽃피는 마을	산업형
	구미시	휴먼 디지털 산업 커뮤니티	문화형

○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지원계획 (국토해양부)

1. 추진배경

-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물적 위주의 국토균형발전 토대 위에 ‘삶의 질’ 중심의 국토균형발전 추진
- 시가지 팽창위주의 도시정책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충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 모색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
- 사업내용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한 주민·지자체의 관심 유도 및 조기정착을 위해 **시범마을·시범도시** 사업을 추진
 - (시범도시) 기초지자체가 주민·지방대학·연구원 등과 네트워크 및 역할분담 체계를 구축하여 그 도시의 경쟁력 우위 부존자원 특화발전 또는 차별화 계획을 수립·추진
 - (시범마을) 주민이 100세대 이하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마을을 진단하고 싹터를 가꾸어 나가는 마을계획을 수립·추진
 -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 평가 총점에 따라 **인센티브 예산을 차등지원**
- 사 업 비 : 150억 원('07년 시범사업)
- 사업기간 : 계속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단위사업 명 /사업량	계	'07	'08	'09	'10	'11 이후
계			15,000	15,000			
국 비			15,000	15,000			

※ 인센티브 성격이 지원금으로 지방비 등을 확보해야 할 의무는 없음

□ 지금까지 추진상황('07년 시범사업 추진)

○ 추진경위

- '06.6월부터 시범사업 평가지표 및 유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시행한 후 **시범사업(시범마을·시범도시)을 공모('06.11 ~ '07.1)**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교수·연구원·NGO등 외부전문가로 **평가(40명) 및 선정(10명)위원회**를 구성·운영('07.2 ~ 3)
-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시범사업 선정 및 지원(안)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위원회**에서 심의조정 및 확정('07.3.20)

○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 '07년 인센티브 지원예산 142억원을 시범도시에 80억원, 시범마을에 32억원, 계획비용 지원금*으로 30억원 배정계획

구 분	추진 주체	응 모	선정 및 지원계획	
			선정결과	지원계획
시범 도시	지자체 주도, 주민참여	89개	5개	15~20억원
시범마을	주민주도, 지자체 지원	49개	25개	1~ 2억원

* 시범도시의 경우 경쟁률이 높았던 점을 감안하여 5개 시범사업에는 들지 못했지만 사업계획이 우수한 6개 사업에 대해 계획비용 지원금(각 5억)을 지원

□ 향후 추진계획('08년 시범사업 추진예정)

○ 사업유형(시범도시)

대유형 (도시대상)	세부유형(시범도시)
활력도시형	농업경제형 산업경제형 업무서비스형 관광레저형
문화도시형	건축문화형 역사문화형 예술문화형 도시경관형
환경도시형	생태환경형 자연경관형 에너지절약 및 창출형
녹색교통 도시형	대중교통형 보행자·자전거교통형
안전건강도시형	건강도시형 방재안전형 도시정비형
교육과학도시형	교육학습형 정보과학형

* 시범마을은 별도의 세부유형이 없음

○ 배점기준

◆ **시범도시(100점)** = 시범사업 60점(서면평가 42점 + 현지심사 18점)+

도시대상 40점(기실시)*

◆ **시범마을(100점)** = 서면평가 70점 + 현지심사 30점

* ' 07 도시대상에 응모한 지자체가 '08 시범도시 선정에 유리
(도시대상 공모시 지자체에 공지)

○ 선정규모 : 아래 기준을 원칙으로 탄력적용

◆ **시범도시** : 6개 사업(점수순*), 20억원 이하 지원

◆ **시범마을** :

16개 사업 이하(점수순), 1~3억 지원

* 다만, 점수순으로 선정했을 때, 6개 대유형 중 **없는 유형**이 있을 경우 그 **유형별 1위에 대해 소규모예산 지급** 검토

□ 혁신도시와 연계 가능성 및 추진방안 등에 대한 의견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물적 위주의 국토균형발전 토대위에 「삶의 질」 중심의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주로 기존 도심(기초지자체)과 마을(시구의 동 단위 마을)을 대상으로 하므로,

- 신규 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도시와는 연계 가능성을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3. 2008년도 선정결과

건설교통부는 2월 20일 교수연구원·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위원회”를 거쳐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 6개, 시범마을 20개를 선정하여 금년 중 관련 예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도시로는 충남 금산군을 비롯하여 제주도 제주시·전남 여수·사경기 과천시 광주광역시 북구·전북 무주군 등 6개 지자체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선정되었다.

○ 이들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충남 금산군에 18억 원, 제주시 15억 원, 나머지 4개 지자체에 각 13억 원씩 총 85억 원이 지원된다.

○ 또한, 시범도시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사업계획이 비교적 우수한 6개 도시에 대해서는 시범도시의 높은 경쟁률을 감안하여 이들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계획비용 지원금을 사업별로 3억 원씩 18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시범도시의 경쟁률: 7.8 : 1(47개 신청사업 중 6개 선정)

○ 시범마을은 부산경기 각 3곳, 서울대전광주경북 각 2곳씩, 대구인천강원충북전남전북 각 1곳씩 선정되었으며, 이들 시범마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1~2억 원씩 차등 지원된다.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범사업은 이번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것으로서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한 주민과 지자체의 관심유도 및 조기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

○ 「시범도시」 사업을 통해서도 지자체가 경쟁력 있는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특화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하고,

○ 「시범마을」 사업을 통해서도 주민이 동(洞)단위 이하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방안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방안 발표

- 지역 재창조를 위한 정부지원 방식의 대전환 모색 -

2006.10.20 국정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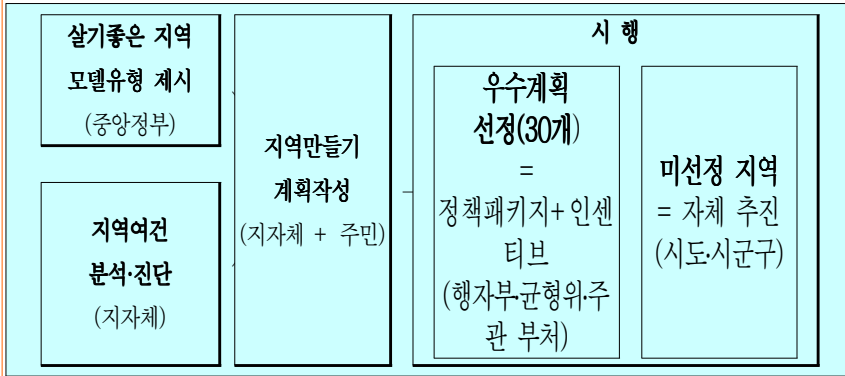
행정자치부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장 박재영

정부에서는 전국에서 의지와 여건이 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범정부적인 지원을 도모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자 하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계획을 확정하여 발표 (2006년 10월 2일)하였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계획 작성에 돌입하였고 전국에서 30개 지역을 뽑는 이번 우수계획 선정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우수계획 선정 틀이 마련되다

우수계획 선정은 먼저, 살기 좋은 지역모델 개발로부터 시작된다. 행자부가 살기 좋은 지역모델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제시하고 (9월말), 지자체는 자체 지역의 여건을 분석하여 최적의 지역(마을)을 선정하여 제시된 모델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계획을 수립한다. 수립된 계획을 행자부에 제출 (12월초)하면 그 중 우수한 30개의 계획을 선정 (12월말)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추가적인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집중적인 중앙정부의 뒷바라지 (2007년 1월 이후)를 받게 된다. 한편 선정되지 못한 지역은 시도와의 협력을 통해 시군구가 자체 추진하게 된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그림〉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틀



살기 좋은 지역모델이 개발되다

행자부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으로부터 수요가 가장 높고 보편적이라고 판단된 9가지의 기본모델을 개발완료 (7월 ~9월)하였다. 기본모델은 산업형, 교육형, 정보형, 생태형, 전통형, 문화형, 관광형, 건강형, 가족형 등이다. 기본모델별로 의미와 특징,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 구성요소와 추진방식이 제시되었다.

〈표〉 살기 좋은 지역모델

	주요 내용	특화형 예시
①산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소재 산업 지원을 통한 마을조성·발전 지역고유 산업, 기술, 인력이 소재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토산업형, 외부기업유치형 등
②교육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특화를 통한 커뮤니티 강화 교육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가 구축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육형, 평생학습형 등
③정보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서비스를 활용한 정보형 마을 조성 정보인프라가 구축되고 정보컨텐츠가 풍부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화마을형, U-village형 등
④생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질의 환경 및 생태를 자원으로 정주여건 조성 생태환경적 요소를 보유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변공간형, 녹색교통형 등
⑤전통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활용한 공간창조 역사적 자원을 구비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마을형, 전통시장형 등
⑥문화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지역의 특화발전 다양한 문화, 인물, 시설 등이 풍부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지향형, 문화산업창출형 등
⑦관광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독특한 관광자원과 매력이 소재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형, 가족리조트형 등
⑧건강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시설 및 문화조성을 통한 지역재창조 운동, 영양, 휴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장수형, 휴양형 등
⑨가족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 요양, 돌봄 등을 중심으로 한 여건조성 가족친화시설 확보가 용이한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네트워크형 등

중앙정부의 정책을 패키지로 하여 제시하다

이번 우수계획 선정에 있어서 백미는 단연 선정된 지역과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하여 묶은 다음 통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업은 부처간의 벽을 허물고 긴밀한 협력이 될 요하는 등 상당히 어려운 작업에 해당된다.

균형위·행자부에서는 올 상·하반기에 걸쳐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관련된 중앙 정부 정책을 발굴하였다. 그 결과 8개 부처의 120개 정책이 조사되었고, 그 중에서 2007년도부터 선정된 지역에 지원 가능한 정책은 총 23개에 350,907백만 원이다. 2008년도이후에는 예산의 사용대상 지역이 확정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정책패키지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질로 우수계획을 선정할 것

먼저, 지역만들기 계획 작성 대상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이다.

시군구는 관할 지역(마을) 중에서 여건이 되는 지역을 엄선하여 지역만들기 계획을 작성하여 시도를 경유하여 행자부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종래의 시군이 관선으로 개편되었으므로 도에서 제출을 하게 된다. 시군구별로 몇 개의 계획을 작성·제출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최적의 지역 1곳을 선정하여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역의 범위는 1개의 마을, 또는 인근의 몇 개의 마을을 묶어서 하던지, 읍·면·동까지 확대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맡겨진다. 그러나 공간적 범위를 정할 때, 실현가능성과 투자재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계획에 담을 내용은 해당 지역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인 여건, 계획이 추구하는 비전과 목표, 계획의 실행방식 및 기대효과 등이다.

셋째는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이다.

모든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항이다. 어떠한 기준으로 살기 좋은 지역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많은 고민들을 하였다. 일단 크게 ① 여건과 의지, ② 계획의 내용, ③ 기대효과로 크게 대별된다.

여건과 의지에는 대상지역이 특화된 브랜드 소지여부, 구성원의 특성, 지역민을 위한 소득기반이 존재하고 있는지 등과 지역 스스로 확보한 자체 재원 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계획의 내용은 목표의 적합성, 예술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재원투자의 효율성 및 주민참여도 등이 주된 평가사항이다.

기대효과는 계획이 완성될 경우 당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정도와 타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등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평가기준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나라 지역개발 분야에서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느냐를 포함시킨 것과, 주민들이 계획수립과정과 향후 시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일 것이다. 자세한 평가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선정 평가기준

항 목		평 가 지 표	배 점	
지역여건 및 의지	여건	■ 대상지역의 특화브랜드 소지정도	3	17
		■ 대상지역이 발전에 필요한 기반 구비정도	4	
		■ 대상지역 구성원의 특성	3	
		■ 대상지역의 소득기반 존재 정도	5	
		■ 지역공동체 의식 존재 정도	2	
	의지	■ 시군구 자체 재원확보 정도	6	13
		■ 민간자본 유치정도	4	
		■ 시군구 전담조직 정비 및 업무조정 정비	3	
계획내용	목표	■ 비전 및 목표의 적합성	5	5
	총괄 성	■ 계획의 포괄성	7	18
		■ 재원투자계획의 효율성	6	
		■ 비재정활동의 모색정도	5	
	예술 성	■ 품격과 예술성을 갖춘 지역제창조 계획정도	7	7
	지속 가능 성	■ 주민구성원 증가 가능성	4	8
		■ 지역소득기반 확대 가능성	4	
	실행 가능 성	■ 대상지역 범위 선정의 현실성	5	11
		■ 재원확보 방안의 현실성	3	
		■ 전문가적 지원체계 구비정도	3	
	민간 참여	■ 계획의 아이디어 원천발굴과정에 주민참여도	3	11
		■ 계획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도	4	
		■ 지역만들기 시행과정에서의 주민참여방안 반영도	4	
기대 효과	■ 타 지역으로의 파급성	5	10	
	■ 지역사회 삶의 질 개선 기여 정도	5		
기타 가점	■ 모델별로 사업계획의 독창적 아이디어 정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차등적 가점 부여		5	
총 점			105	

넷째는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이다.

범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과 맥락을 같이하여, 먼저 9개 기본모델별로 관계부처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모델별 선정분과를 구성하여 1차 평가(서면심사)를 하게 된다.

1차 평가를 통하여 추천된 2~3배수를 대상으로 민관 15인 이하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현지실사와 브리핑심사를 통하여 최종 30개 지역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지역은 중앙정부의 집중지원으로, 미선정지역은 자체적으로 성공사례 창출에 나선다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것과 같이, 선정된 30개 지역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해주고, 행자부가 추가적인 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한다. 3년간에 걸쳐 20억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예산과정을 거치고 있다. 가족형모델에 선정될 지역에 대한 지원을 예로 들어본다면, 먼저, 여성가족부가 제시한 6가지 정책의 지원을 받게 되고, 해당 지자체가 계획서에서 요청한 타 부처 필요정책 중 가능한 사업, 예산, 제도 등을 지원받는다. 그리고 2007년도에 제공될 추가인센티브 5억 원을 가지고 지역의 예술적인 디자인과 주민활성화프로그램을 만들게 된다. 이와 같은 재정적인 지원에 더하여 여성가족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전문 인력들이 가족형으로 선정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이번에 마련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지자체 우수계획 선정계획을 살펴보았다. 내년말 또는 3년후에 우리나라에도 과연 유럽과 일본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지역의 모습이 몇 개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의 어깨에 달려 있다. 중앙정부의 정교한 제도설계와 범부처적인 협력과 지역에 대한 지원, 지자체의 질적인 발전에 대한 필요성 공감과 동참,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들의 생산적인 참여! 이 세가지 요소가 하나가 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예술인 도시활력화 사업〉

○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중소기업청)

2008년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2008년도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시장 및 상점가 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1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지원사업

1 경영혁신 및 공동사업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마 케 팅	① 공동마케팅 (60억원)	고객 및 매출 증대를 위한 이벤트·홍보, 공동쿠폰 발행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	2~8천만원 국비 70% 상인 30%	상인조직 활동 이 활발한 곳 [단위사업]참 조
	② 우수시장 상품 전시회 개 최(4억원)	지역 우수상품 및 특산품 판매· 전시회 개최 비용	7천만원 이내 국비 70% 상인·지자체 30%	10개 이상 시 장 상인 50명 이 상
공 동 사 업	③ 공동상품권발 행(6억원)	시도를 구역으로 재래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공동 상품권 발행비용	1억원 이내 국비 70% 상인·지자체 30%	10개 이상 시 장 상인 200명 이 상
	④ 상인공동구판 매사업(12개 품목)	공동구매 상품의 브랜드·디자인개발, 홍보·판촉, 운송비 등 지원	소요비용의 50~100%	품목별 상인 50 인 이상 참여
	⑤ 상품정보지홍 보	지역특산품, 시장 우수상품 등 경쟁력 있는 상품정보 등록	전액보조	가격 경쟁력있 는 상품 우선지 원
교 육 연 수	⑥ 상인 교육·연 수(25천명)	마케팅·경영기법·상품 및 고객관리·의식 혁신 등 교육 지원 (상인대학, 단기위탁교육, 현장교육, 전 문교육, 해외연수 등)	전액보조 (단, 해외연수는 50%보조)	시장, 상점가, 시장활성화구 역내 상인·예 비창업자

② 시장관리 및 점포경영 선진화

분 야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 원 조 건
시장 관리 점포 경영 선진 화	⑦ 정보화 교육(10천명)	컴퓨터 활용, 인터넷 영업기법, 상품개발 및 기획, 온라인 쇼핑몰 운영 교육	전액보조	시장상인·예비창업자
	⑧ 인터넷 쇼핑몰 사업(6천명)	에브리마켓(www.everymarket.co.kr) 무료입점, 상품판매지도, 상품컨텐츠 제작 지원 등	전액보조	정보화 교육 이수자 우대
	⑨ 시장자문·점포 지도 · 시장 150개 · 점포 700개	【자문】 시설현대화, 경영혁신, 상권개발, 시장정비사업 자문 【지도】 상품 디스플레이, 점포인테리어 등 지도	전액보조	【자문】 연 8일 이내 【지도】 연 4일 이내
	⑩ 우수점포 지원 (150개)	점포경영 우수 점포에 인증표식 및 인증서 수여, 판촉물 지원	판촉물 70만원이내	시장·상점가 내 점포

3 시설현대화

사 업 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 원 조 건
⑪ 시설현대화 (1,345억원)	주차장, 아케이드, 진입로, 화장실, 안전시설,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문화공간 설치 등	70억원 이내 국 비 60% 지방비 30% 민 간 10%	‘07년에 사업비를 신청한 곳 * 주차장, 진입로 등 공공시설은 민간부담 면제
⑫ 구조개선 공 동 사 업(30억원)	공동배송센터 등 택배시설, 재해로 인한 공동시설물 복구, 전기·소방·안전·위생시설 등	국비 2억원 이내 국 비 60% 지방비 30% 민 간 10%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 세부조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참조

4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

사 업 명	지 원 내 용	지원한도	지 원 조 건
☞ 시장·상점가 활성화 연 구용역(11 억원)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의 상권개발 및 활성화 방안, 지역 상권개발 및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등	6천만원 이내 국 비 60% 지방비 40%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투자 확보한 곳, '09년 사업착 수예정인 곳 우선
☞ 상점가시장활 성화구역 지원(141 억원)	주차장, 아케이드, 도로포장, 테 마거리 조성 등 상업기반 시설 (주차장, 진입로 등 공공시설은 민 간부담 면제)	70억원 이내 국 비 60% 지방비 30% 민 간 10%	‘07년에 사업비를 신청한 곳 연구용역, 컨설 팅을 마친 상점가 우선지원

2

지원대상

□ 지원요건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재래시장, 상점가 및 시장활성화구역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우선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지역추진계획에 반영된 시장·상점가·시장활성화구역
-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청장 이상의 단체표창을 받은 시장·상점가
- 상인 자부담 비율, 상인교육 이수율, 상인회 가입율이 높은 시장·상점가
- 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마친 시장·상점가 등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8. 1. 31 ~ 2. 20(단, 일부사업은 연중수시)
- 신청 접수처

접 수 처	대 상 사 업	신 청 절 차
중소 기업 청	구조개선 공동사업, 시장·상점가활성화 연구용역, 공동상품권 발행	시장상인회 → 시·군·구 → 시·도 → 중기 청
시 장 경 영 지 원 센 터	공동마케팅, 우수점포, 상인교육·연수, 자문·점포지 도, PC보급 및 정보화 교육	시장상인회 → 시·군·구 → 시장경영지원 센터
전 국 상 인 연 합 회	공동 구·판매, 온라인쇼핑몰 사업, 우수시장 상품전 시회 및 무가정보지 홍보사업	상인회 → 전국상 인연합회 * 지역전시회는 시·도 경유

4

행정사항

- 국고보조사업 집행기관의 장은 단위사업별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세부 집행기준을 수립·시행할 수 있음.
- 국고보조사업 집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5

문의처

기 관 명	주 소	전화번호	FAX
중소기업청	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042-481-4560/3	042-472-7935
시장경영지원 센터	서울시 중구 숭례문남길 7번지 대전시 동구 자양로 9(교육관)	02-751-0721/9 042-252-1427/30	02-751-0797/9 042-252-1426
전국상인연합 회	대전시 동구 중동 92-2	042-257-3875/6	042-257-3877

* 자세한 공고내용 및 신청서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알림마당/공지사항 및 시장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ijang.or.kr) 참여마당/알려드립니다, 전국상인연합회 홈페이지(www.ukma.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31일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지원센터 상인연합회

○ 문화/관광 등 테마와 연계한 시장 육성 (보도자료)



중소기업 상담은 ☎ 1357
중소기업청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보
도

자
료**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 Tel. 042-472-3263 | www.smba.go.kr
Fax. 042-472-3264

■ 문의 : 시장개선과 과장 조규중 사무관 배창우 042-481-4516 /
F 042-472-7935

문화 · 관광 등 테마와 연계한 시장 육성

- '08년 4개 시장 시범개발, '12년까지 50개 시장 육성 -

□ 중소기업청 (청장 홍석우)은 전통시장에 지역문화와 시장특성을 살린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문화 · 관광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 ·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키로 하였음

○ 금년에 **4개 시장을 선정하여 시범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산하여 **'12년까지 50개 시장을 육성**할 계획임

* 추진계획(곳) : (08) 4 → (09) 10 → (10) 10 → (11) 13 → (12) 13

○ 이는, 그간의 정부지원이 비가림 시설 등 **일률적인 시설개선 지원**에 치중함으로써,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전통시장만이 가진 강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에서 출발**하게 된 것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도심지 시장**은 젊은 세대가 즐겨 찾을 수 있도록 문화 전시실·테마거리·고객쉼터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테마형 시장으로 육성**하고,
 - * (사례, 의정부제일시장) B-boy 공연장 등 젊은이들이 찾을 수 있는 문화공간을 설치
- **지방시장**은 **지역특산물 및 인근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위해 특산품판매장·전통문화 체험장 등을 설치하여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임
 - * (사례,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지역특산물(표고버섯, 한우 등)을 테마로 주말 관광형 시장으로 전환('07.5)하여 매출 50%이상 증가
- 이와 같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부·관광공사·문화관광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T/F팀을 구성**(3.31)하였으며,
- 4월부터 실태조사와 시범 육성모델 연구용역을 거쳐 시범시장을 선정(4~6월)하고, 시장별 사업추진계획 마련(7월)하여, 금년 8월부터 문화·관광형 시장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임
- 한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면, 문화시설·특판장 등 하드웨어 지원 외에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 지역 및 시장특성에 맞는 **시장축제,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전통시장 투어상품 개발 등을 지원**하여 고객집객력을 제고하고,
- 외래관광객 편의를 위한 안내표지판 확충,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지원도 병행하게 됨

<첨부>

전통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테마형 시장 육성(안)

- ◇ 지역여건과 시장특성에 맞는 성화 시장육성을 위해 지역문화와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육성
- ◇ 금년에 시범시장(4곳)을 대상으로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

1. 현황 및 문제점

- 정부는 지난 5년간 562개 재래시장에 7,136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시설 개량 등을 지원
 - * 지원예산(억 원) : (03) 834 → (04) 1,650 → (05) 1,268 → (06) 1,478 → (07) 1,906
 - * 시설개량 : 아케이드(401개), 주차장(193개), 건물개량(395개), 진입로(53개)
- 그간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지역과 시장특성을 연계한 선택과 집중 보다는 주차장·아케이드 등 일률적인 공동기반시설 위주의 양적 지원에 치중하여 성과제고에 한계
 -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시장 활성화 전략 필요

2. 추진과제

□ (추진체계) 문화부, 중기청 및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T/F 구성**('08.3)

○ 문화·관광형 시장 개발이 가능한 후보지시장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범 시장**” 선정(4개 시장)하고, 시범시장 지원계획 마련('08. 6)

○ 금년 시범모델 개발을 통해 ‘09년부터 본격 추진하여 ’ **12년까지 50개 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

* 추진계획(곳) : (08) 4 → (09) 10 → (10) 10 → (11) 13 → (12) 13

□ (주요 지원내용) 문화·관광형 시장 특성을 살린 **문화적 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테마시장으로 육성

○ 시범시장에 판매시설·문화시설·고객편의시설·부대시설 등 **기능별 시설**과 시장을 대표하는 **상징물·조형물·테마거리** 설치 지원

－ (판매시설) 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기존 판매시설은 고객동선 및 시장특성을 고려하여 재배치

－ (문화시설) 내·외국인들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장, 야외공연장, 문화 창작교육공간 등 조성

－ (편의시설) 고객쉼터, 만남의 장소, 야외놀이터, 분수대, 주차장, 고객지원센터(안내소) 등 설치

○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운영** 지원

－ 일시적인 이벤트를 지양하고 문화프로그램 상설화 및 문화마케팅 지원

－ 공연, 전시 등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테마관광상품 개발 및 접근성 강화**

- 지역특산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전통시장 투어 등 **테마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외래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는 안내표지판 확충 및 통역서비스 등 지원

3. 향후 추진계획

○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T/F 구성 : '08.3.31(월)

* 문화부(지역문화과, 국제관광과), 중기청(시장개선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시장경영지원센터, 관광공사, 외부전문가 등 10명 내외

○ 실태조사 및 시범모델 연구용역 : '08.6.30(금)

○ 시장별 사업추진계획 마련 : '08. 7.30(월)

○ 문화·관광형 시장 개발 추진 : '08.8.1부터

○ 재활용 센터 운영 설치 및 활성화 방안 (환경부)

I. 검토 배경

□ 법적 의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미흡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05.12)으로 시장·군·구청장(이하 “지자체장”)은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해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미흡

- 지자체가 설치·운영해야 하는 재활용센터의 전국 총 수는 380개소이나 현재 설치·운영중인 재활용센터는 104개소(민간위탁운영 포함)에 불과

□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의무규정의 실현가능성 문제 제기

-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재활용여건 등이 지자체 마다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의무를 획일적으로 규정한 현행 규정의 현실성 문제를 지자체 등에서 제기

□ 「재활용촉진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방향 모색 필요

- 다수의 지자체에서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을 기피하거나 형식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례가 많음
- 재활용센터 운영실태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중고물품의 교환 및 대

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이라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재활용 센터 설치·운영방안 검토 필요

II. 근거법령 검토

□ 재활용센터의 정의 (법 제13조의2)

-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자체장”)이 중고물품의 교환 및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

※ 대형폐기물 : 가정·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가구, 폐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 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것(법 제2조)

□ 지자체의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의무 등(법 제13조의 2)

- 지자체장은 재활용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하며, 인구 20만 명 초과 시마다 1개소를 추가 설치·운영하여야 함
- 지자체장은 대형폐기물을 수거·선별·처리함에 있어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해야 하며, 지자체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함
-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재활용센터 설치 및 시설기준 (법 시행령 제15조의2)

-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준수(단, 인구 3만 이상의 도시가 형성되지 아니한 군(郡)지역은 제외)

- 중고물품을 진열하는 공간의 바닥면적 합이 150㎡이상
- 중고물품의 수리 등을 위한 별도의 작업공간 설치
- 중고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 창고를 1개소 이상 설치, 중고물품 수거·운반차량 1대 이상 보유
- 교환·판매, 수리 및 수거운반 담당자를 각 각 고용

Ⅲ.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현황

□ 설치·운영 현황¹⁾

〈인구대비 재활용센터 설치현황〉

- 법 제13조의2에 따라 인구 기준으로 설치해야 하는 전국의 재활용센터 총 수는 380개소
- 현재 설치·운영 중인 재활용센터는 104개소(**지자체 설치·운영, 민간위탁 운영 시설**)로서 법적 의무대상 시설 수보다 276개소 미달
-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재활용센터 731개소를 포함할 경우 835개소로 법적 의무대상 시설 수 충족 가능
- 의류, 장난감, 서적 등 소형 중고물품을 교환·판매하는 상설알뜰매장은 총 38개소 운영 중

(단위 : 명, 개)

1) 환경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07년도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구분	인구 (명)	법적 의무 설치 개수	설치·운영 개수					
			지자체 직영+ 민간위탁운 영 (A)	민간설치· 운영 (B)	상설알뜰 매장[C]		D (A+B)	E (A+B+ C)
					지자 체	민간		
서울특별시	9,820,171	61	33	46	0	0	79	79
부산광역시	3,523,582	25	8	91	0	0	99	99
대구광역시	2,464,547	16	0	90	0	0	90	90
인천광역시	2,531,280	18	3	105	0	0	108	108
광주광역시	1,417,716	10	3	10	1	0	13	14
대전광역시	1,442,856	11	4	0	1	0	4	5
울산광역시	1,049,177	7	1	39	1	0	40	41
경기도	10,415,399	67	17	120	0	3	137	140
강원도	1,464,559	21	6	14	1	4	20	25
충청북도	1,460,453	16	3	18	0	3	21	24
충청남도	1,889,495	19	8	41	0	0	49	49
전라북도	1,784,013	23	1	4	3	2	5	10
전라남도	1,819,819	25	7	13	0	7	20	27
경상북도	2,607,641	28	6	29	1	8	35	44
경상남도	3,056,356	28	4	108	1	0	112	113
제주도	531,887	5	0	3	2	0	3	5
총계	47,278,951	380	104	731	11	27	835	873

〈공공 재활용센터의 취급품목 및 설치기준 준수 여부〉

- 법은 중고물품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특히 대형폐기물의 경우 재활용센터를 우선 활용토록 규정
 - 재활용센터는 대표적인 대형폐기물인 가전제품, 가구류 취급 필요
- 지자체에서 설치·운영 중인 104개 재활용센터 중 77개소(74%)가 가전제품과 가구제품을 함께 취급하며,
 - 가전제품만 취급하는 재활용센터는 12개소(11.5%), 기타제품(의류, 장난감, 서적 등)을 취급하는 재활용센터의 개수는 15개소
- 법적 설치기준(150㎡이상, 3인 이상)을 준수하지 못하는 재활용센터는 45개소

(단위 : 개)

구 분	민간위탁+ 구청직영(A)	재활용센터취급 품목별형태			설치기준 미준수
		가전·가구류	가전류	기타	
서울특별시	33	32	1	0	9
부산광역시	8	7	1	0	4
대구광역시	0	0	0	0	0
인천광역시	3	2	1	0	0
광주광역시	3	3	0	0	2
대전광역시	4	3	0	1	1
울산광역시	1	1	0	0	0
경기도	17	13	4	0	8
강원도	6	2	2	2	4
충청북도	3	2	0	1	2
충청남도	8	2	0	6	6
전라북도	1	1	0	0	1
전라남도	7	4	1	2	2
경상북도	6	4	1	1	4
경상남도	4	1	1	2	2
제주도	0	0	0	0	0
총 계	104	77(74.0%)	12(11.5%)	15(14.4%)	45(43.3%)

〈민간 재활용매장의 취급품목 및 설치기준 준수〉

- 민간에서 설치·운영 중인 725개 재활용매장 중 385개소(53%)가 가전제품과 가구제품을 함께 취급
 - 가전제품만 취급하는 재활용매장은 286개소(39%), 가구제품만 취급하는 재활용매장은 30개소(4%), 기타 품목을 취급하는 재활용매장은 20개소
-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재활용매장은 612개소(84%)로 민간에서

설치·운영 중인 재활용매장의 대부분은 재활용센터 설치기준 미달

(단위 : 개)

구분	민간	취급 품목				설치기준 미준수
		가전·가구	가전	가구	기타	
서울특별시	46	33	13	0	0	21
부산광역시	91	74	11	2	3	82
대구광역시	90	54	34	1	0	84
인천광역시	105	18	81	3	3	99
광주광역시	10	1	7	0	0	6
대전광역시	0	0	0	0	0	0
울산광역시	39	20	17	1	1	35
경기도	120	50	40	19	7	96
강원도	9	2	4	0	3	9
충청북도	18	15	3	0	1	11
충청남도	41	18	18	4	1	36
전라북도	4	3	1	0	0	2
전라남도	13	1	10	0	0	11
경상북도	29	20	8	0	0	25
경상남도	108	75	39	0	1	95
제주도	2	0	0	0	0	0
총 계	725	385(53%)	286(39%)	30(4%)	20(3%)	612(84%)

□ 운영 형태별 사례조사 결과²⁾

가. 지자체 직영 (서울시 00구 재활용센터)

- 00구재활용센터는 재활용센터에 수거·운반 인력과 수리인력 등 구청 직원인원이 상주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취급 품목·운영방법 등에서 재활용센터

2) 수도권 내 지자체 직영, 민간위탁운영, 민간 중고매장 등 운영형태별 4곳에 대한 실태조사('07.9월)

터의 활성화 미흡

- 취급품목은 가전제품이 주종을 이루며 가구류나 기타 대형물품은 보관 장소가 협소하고 경제성이 낮아 취급을 기피
- 폐가구류는 원형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수거가 되고 있으나, 외부 형체의 손상 등으로 별도 수리·가공이 필요한 것은 미(未)수거
- 지역 주민들의 재활용제품 사용촉진 목적보다도 사실상 법적 설치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
- 중고물품 진열장소도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적 설치기준 미(未)준수
- 예산 부족으로 센터의 부지도 도로상에 가건물 형태로 운영
- 수거·운반체계는 배출자가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배출시 재활용센터에 연락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재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재사용 가능품목만 수거하여 판매

나. 민간 위탁 운영

〈서울시 00구 재활용센터〉

- 00구 재활용센터는 구와 민간단체(사단법인)와 계약체결에 따라 관할구역 내 총 2개소(00동, 00동)를 위탁 운영
- 00동은 개인소유 부지의 일부 토지를 임대(임대 보증금을 시비와 구비 분담) 사용, 00동 재활용센터는 구의 재활용품 선별장 부지의 일부를 활용
- 위탁계약 체결에 따라 (사)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에서 전반적 운영을 총괄하며, 매 분기별로 운영실적을 구에 보고

- 구청 홈페이지, 지역신문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 배출 시(時) 우선적으로 재활용센터에 연락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에게 홍보
 - 재활용센터에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재활용가능 여부를 판단한 후 재활용가능 품목에 대해서만 센터로 무상 수거·판매
 - 수거된 대형폐기물은 재활용센터에서 수리·수선하여 전시
 - 재활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태의 품목은 배출자가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신고를 관청에 하는 경우 재활용센터에서 중간처리장까지 운반을 대행하며 사후적으로 운반비를 구청으로부터 지원받음
 - 현실적으로 중고 재활용품의 판매금액 만으로는 건물 임대비용·인건비 등을 충당하기 어렵지만, 구청에서 수집·운반비의 지원 등으로 적자금액을 보충 가능
 - 지역 주민들에게 대형폐기물 배출시 재활용센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편리성·효율성 도모 가능
- 취급품목도 가전제품 및 가구 외에 완구, 의류, 도서 등 기타 생활용품을 다양하게 취급
 - 별도의 전시·판매장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종류의 물품을 선택하여 구입 가능

〈인천시 00구 재활용센터〉

- 00구 재활용센터의 운영주체는 노숙인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³⁾에서 위탁 운영
 - 00구에서는 대상 부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사단법인에서 노숙자들을 수용하면서 재활용센터의 운영인력으로 활용
 - ※ 사단법인 지원금 등으로 센터의 운영·인건비 부담이 낮음
 - 재활용센터 운영 수익성보다는 노숙자 자활사업과 병행하여 센터 운영
- 부지는 공유지 924㎡를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편의시설·전시판매장·시민의 접근성 등은 대체적으로 미흡
 - 가전, 가구류 및 일반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교회 복지기관 등으로부터 기부 받은 물품이 상당부분 차지
 - 중고물품은 주민들의 연락을 받고 방문수거, 순회수거하며, 상태가 양호한 가전은 매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고가 매입은 제한

다. 민간 중고매장 (인천시 00구)

- 개인이 영리목적의 사업장으로 주요 취급품목은 가전제품과 가구류이며 그 외 생활폐기물은 낮은 수익성으로 취급 기피
 - 접근성이 양호한 시가지의 자기소유 3층 건물의 대부분을 전시·판매장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나 보관 장소는 협소
 - 판매가격이 높은 중고물품 및 단기간 유통 가능한 품목만 취급하며, 장기간 보관이 필요한 수요가 적은 생활용품은 취급 기피
- 시설기준은 양호하며, 공공재활용센터와 기능·역할·중고품 확보 및 운영

3) 인천광역시 등록 사단법인

방법 등이 유사

□ 재활용센터 사례조사 검토 및 평가

- 지자체 직영보다도 민간 위탁운영의 사례가 비교적 효율적임
 - 취급품목의 다양화, 수익성, 지역주민의 활용도 등 양호
 - 지자체 직영 시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부족, 단체장의 관심 부족 등으로 재활용센터 운영 활성화 장애
- 법상의 재활용센터 개념을 확대·적용하여 민간 중고매장 활성화 필요
 - 공공 재활용센터와 민간 중고매장의 기능·역할·중고품의 확보·매장운영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움
 - 공공에서 효율적 운영이 어려운 재활용센터를 직접 설치하기보다 민간 중고매장의 활성화를 통한 법 취지 실현 방안 모색 필요
 - 단, 민간은 수익성을 이유로 가구류 등의 취급을 기피하거나 보관창고부족 등의 문제는 지자체 등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공공부문과 연계된 재활용센터는 다양한 종류의 대형폐기물을 취급토록 하여 공익적 기능부여 필요
- 재활용센터와 지자체의 대형폐기물 배출·수거·처리체계와 연계된 재활용센터 활성화방안 모색 필요 (**법 제13조의2 제3항**)
 - 가전·가구류 배출자는 재활용센터에 우선 연락토록 하고, 재활용센터는 재활용 가능여부와 상관없이 대형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는 체계 구축 필요 (**서울시 00구 사례 참조**)
 - ※ 재사용 불가능한 대형폐기물을 재활용센터가 운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필요
- 재활용센터 설치장소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하나, 도심지의 경우 부지확보 및 건물 임대비용 과다하여 문제 발생
 - 재활용센터의 입지를 위한 공용부지 활용, 저가 임대, 건물 임차료 지원

등 입지지원 방안 필요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노동부)

1. 양질의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대책 추진 (국회 예산보고자료)

☐ 사업개요

-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및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로 육성·지원
- 구조적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층의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동 (school to work transition) 및 해외취업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 140,396백만원
 - 참여인원 소폭 확대(12,000→12,445명), 지원 단가 인상(월 835→855천원)
 - * 기업연계형 사업(3,600→5,772명), 사회적기업지원(700명→1,500명)
 - 취업애로계층 직업진로개발지원 : 100명('08년 신규)
-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 : 22,011백만원
 - 청소년에게 산업현장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과 경력형성의 기회제공 (연수지원제 29,460명)
- 해외취업지원 : 11,129백만원
 - 청년실업대책을 위한 해외취업연수(2,300명, 9,200백만원) 및 해외취업 알선 등(1,929백만원)
- 청년층개인별종합취업지원서비스(YES)운영 : 1,000백만 원
 - 취업애로 청년층에게 개인별로 특화된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3,000명, 참여 수당 4주에 30만원)

□ 2008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 감 (B-A)	%
계	166,674	174,536	7,862	4.7
○ 사회적 일자리 창출	121,541	140,396	18,855	15.5
○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	34,718	22,011	-12,707	-36.6
○ 해외취업지원	10,415	11,129	714	6.9
○ 청년층개인별종합취업서비스운영	-	1,000	1,000	순증

2. 사회적 기업 육성 관련 연두 업무보고

- 인증요건 완화, 재정지원경영권설탕·조세감면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천개 육성

* 5개년 계획 수립('08.8월), 사회적 기업육성법 개정 추진(금년 정기국회 제출)

- 관계부처의 사회적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 지원('08년~)

3. 2008년도 제2차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 공고

노동부 공고 제 2008 - 91호

2008년도 제2차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 공고

‘사회적 기업’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8년도 제2차 『사회적 기업』의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이란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법 제2조)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함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함

1. 사회적 기업 인증요건

①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비영리 단체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 ※ 법인 내 사업단은 ‘법인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제출서류도 사업단의 것 제출)

② 사회적 목적 실현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③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기준**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동일기간 총 노무비의 30%이상

- ④ 유급근로자 고용
-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구비(정관 등에 기재)
- ⑥ 정관규약 등 구비, 기재사항(법9조) 준수
- ⑦ 상법상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2. 제출서류(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 사회적 기업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조직형태 확인 서류(법인 허가증 사본 등)
- 유급근로자 명부
- 사회적 목적 실현의 구체적 판단기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 충족 확인 서류
 - ※ 일자리제공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사회서비스제공형(별지 제3호서식), 혼합형(별지 제4호서식), 기타형(별지 제5호서식)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하고 증명 서류 첨부
-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설비 등 지원 사항 확인 서류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 확인 서류
 - ※ 이해관계자 참여 등 의사결정 구조가 규정된 정관 등 및 실제 운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제출
- 정관이나 규약 등
- 사업내용, 수익확보 수단, 연락처 등을 별지(인증신청기관 개요)에 기재하여 첨부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08.5.1(목) ~ 2008.5.30(금)
- 접수처 : 관할지역 노동부 지방노동청 및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 고용지원센터의 주소, 연락처, 관할구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 (jobcenter.work.go.kr)참조

4. 인증 결과 통지

- 인증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

5.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알림마당/알림/공고) 및 사회적 기업 웹페이지(www.socialenterprise.go.kr)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노동부 일자리창출지원과(02-507-6267), 관할 종합고용지원센터(1588-1919),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기관은 현재 공모 중이므로 추후 별도 공지

4. 사회적 일자리 사례 : (주) 노리단 -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 ▶ 2008. 4. 29 배포
- ▶ 총 3쪽(붙임 포함)

▶ 일자리창출지원과
김덕호 과장
오은경 사무관
▶ ☎ 507-6267, 2110-7171
▶ E-mail :
ekoh@molab.go.kr

〈 본 자료는 <http://www.molab.go.kr>

(노동부 뉴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사회적 기업 ‘노리단’ 방문- 일하면서, 놀이, 배우는 사회적 기업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30일 오전 사회적 기업 인증 받은 (주)노리단(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대표 안석희)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면서도 이윤을 창출하여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노동부는 현재까지 총84개 기관을 사회적 기업 인증한 바 있다.
- 이날 방문한 (주)노리단은 페타이어 등 재활용품을 활용하여 만든 악기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워크숍 등을 하는 문화기업이다.
- ‘04년 서울시와 연세대가 협력하여 만든 서울시립청소년직업센터(하자센터)에서 독립하여 ’ 07년 제1차 사회적 기업 노동부의 인증을 받았

으며

- 청년 실업자 등 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연주하고 춤과 노래를 곁들인 퍼포먼스를 한다.
- 거리공연 연200회, 10개국 해외공연 등 국내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07년 연매출은 5억8천에 이른다.
- 이영희 장관은 “노리단은 고용·예술·교육 등을 통합한 새로운 사회적기업의 유형으로, 신선한 시도라고 생각된다.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노리단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기업 모델이 발굴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고 말했다.

○ 서울 거리 아티스트 (서울문화재단)

1. 사업소개

- 서울 거리아티스트 제도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거리예술가들이 자유롭게 공연예술 활동을 펼침으로써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자 시작
- 서울 거리아티스트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거리예술 지원 프로그램

□ 기본개요

- 사업명 : 2008 서울 거리아티스트

○ 사업목적

- 서울의 주요거리를 중심으로 점진적 거리예술활동 프로그램 확대
- 거리예술 공연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활동지원금에 대한 의존도 축소
-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 참여확대 및 청계천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도입

- 사업일시 : 2008. 3월 ~ 2009. 2월

※ 09년 동절기('09. 1~2월은 주말시행)도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 계속적 관리

- 사업장소 : 서울의 주요 거리지역 및 문화예술의 거점지역을 연계한 장소

- 청계천 : 청계광장 ~ 동대문 (재단에서 정한 주요 거점지역에서 시행함)
- 대학로 : 마로니에 공원 (대학로거리공연연합회에서 관할함)

참고자료

1. 문헌자료

- 이창수, 2003,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주민자체센터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예술인 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문화관광부, 2006, 「문화정책백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7, 「2006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7, 「문예연감」
문화관광부, 2007, 「2007 공연예술실태조사」
문화관광부, 2007, 「문화예술통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08, 「문화예술 vol. 328 봄호」

2. 인터넷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http://www.mct.go.kr/>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지식경제부 <http://www.mocie.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환경부 <http://www.me.go.kr/>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서울문화재단 <http://www.sfac.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 <http://www.arko.or.kr/>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http://www.arte.or.kr/>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www.kf.or.kr/>
과천한마당축제 <http://www.gcfest.or.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정보문화센터 <http://www.cric.re.kr/>
Palmerston North Community Arts Council(<http://www.pncac.org.nz>)
(주)이장 <http://www.e-jang.net/>

